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폐기법안 분석

지은초·장윤정 부연구위원

CONTENTS

I.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법안 현황	8
II. 재정 관련 제·개정법률안	19
III. 기타 제·개정법률안	65
IV. 부표	72

연구 요약

배경 및 필요성

본 보고서는 재정당국의 국회 대응 지원을 위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제·개정 법률안을 기재부 소관국·실·과 별로 정리하였음

- 통상 국회 개원 직후에는 이전대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중 다수가 재발의되며, 이는 재정당국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소관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는 재정당국에 참고자료 및 검토의견을 요구
- 폐기 법안의 주요내용 및 소관 실·국별 분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정당국 업무 및 재정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발굴을 지원

분석 대상 및 유형 분류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 26,853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안은 2,370건이며, 이 중 임기만료 폐기된 재정 관련 법안 658건이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임

-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안 및 기획재정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 중 의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어 처리된 법안과 조세법 관련 법안을 제외
- 제안 내용의 유사성과 개정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법안을 분류하고 정리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를 개편하고자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재정정책국 소관, 49건)

- 현행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과 재정운용의 공공성 증진을 목표로 함
 -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등에서 건전재정의 원칙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사대상 사업과 면제요건등을 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음
-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은 재정총량을 수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발의한 것처럼 독립적인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박대출(국)외 35인)은 관리재정수지 비율 3% 이내,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재정건전화법안(정부)은 국가채무총액 및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에 쓰이는 세계잉여금 비율을 50%로 상향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개편을 위한 법안은 금액기준을 완화하려는 유형과, 제38조 제2항의 제외대상사업 목록에 관심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이 대다수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현행 제외대상사업인 국가안보,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에 더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접경지역 SOC 설치사업, 광역교통시설 사업 등을 추가하고자 함

예·결산제도

관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과 새로운 인지 예·결산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이 예·결산제도 관련 제·개정안의 주종을 이룸 (재정정책국 및 재정관리국 소관, 168건)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결산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 요건과 운용원칙, 예산안의 편성 심의 절차 및 예·결산시 첨부서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4조(회계구분)과 제5조(기금의 설치)를 통해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정한 사업 운영이나 자금의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할 때 각각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별표 1](특별회계)과 [별표 2](기금)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성인지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포함한 20종의 첨부서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7조와 제57조의2는 각각 성인지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규설치하여, 함께 발의한 타법 제·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재정사업의 자금 운용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법안 : 85건
 - 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부모보험기금
- 인지 예·결산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34조와 결산 첨부서류를 열거한 국가회계법을 동시에 일부개정하려는 법안 : 33건
 - 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서, 청년인지 예·결산서

국유재산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국유재산 이용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유형이 대다수 (국고국 소관, 80건)

- 국가가 보유한 토지 등의 국유재산은 정책사업 추진의 중요 자원이지만, 해당 사업이 국유재산 이용 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료 납부 의무 발생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표에서 1호부터 216호까지 이용특례 대상 사업의 근거법과 특례의 종류(사용료감면, 장기사용, 양여) 및 기한을 열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련 폐기의안은 함께 발의된 타법 제·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에 관련된 재정사업의 국유재산 이용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유형이 대부분
 - 예) 민간해양구조대법률안 발의와 연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의 국유재산 이용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추진

공공기관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직무상 정보 남용 등의 문제가 제21대 국회 중 제기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및 인사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다수 (공공정책국 소관, 139건)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경영공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재무성과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
-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150억원 이상의 자산매각 시 국회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재무건전성 향상을 도모
- 인사제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들은 직무상 정보 이용 비리와 관련한 징계 및 처벌 강화,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이 주요 내용

조달계약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국가의 계약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계약운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 다수 (국고국 소관, 58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가에 공급하는 상대방의 자격, 입찰 및 심사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중대재해 유발자, 위법행위를 한 자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 예) 성폭력범죄자, 근로 강요 사용자,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고려

부담금

신규 공익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유형의 법안 (재정관리국 소관, 23건)

-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
- 부담금 신설을 위해, 함께 발의한 타법 제·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별표를 개정하고 이에 관련된 재정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 다수
 - 예)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절차와 정산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과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율 인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 다수 (예산실 소관, 21건)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수행 결과로 작성하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강화 및 부정사용시 환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형의 법안 존재
 - 법 제27조 이하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 관련 조문을 개정, 제31조 이하 보조금의 반환 및 수행 배제 조문 개정
-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정하도록 한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규 국고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의 법안 다수 존재
 - 예) 농업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에 국고보조율 50%까지 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자립 정착금 국고보조 등

기타법안

협동조합, 담배사업, 통계 및 기타 현행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개정안(120건)

- 협동조합 기본법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 소관)
 - 공제사업 실시, 운영절차 개선, 처벌관련 사항 등 개선
- 담배사업법 (국고국 출자관리과 소관)
 - 담배 판매운영 관리를 개선하여 유사담배 관리, 경고문구 등을 강화
- 통계법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소관)
 - 통계법 개정을 통해 공개 관리 절차, 분류체계 개선 등 도모
- 기타 일부개정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
- 제정법안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5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3건, ESG 관련법 제정안 3건 등

목 차

I.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법안 현황

1.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 현황	8
2. 분석 대상 및 유형 분류	9
3. 분석 대상 법안 구성 및 발의 추이	13

II. 재정 관련 제·개정법률안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	19
가. 재정건전성	19
나. 예·결산	20
다. 특별회계 및 기금	26
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34
2.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가. 관리제도	38
나.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39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	
가. 경영평가 및 공시항목	45
나. 인사 및 운영	47
다. 기재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법	52
라. 민영화 및 기타 제정법안	55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가. 계약제도 개선	56
나. 조달 및 기타	58
5. 부담금관리 기본법	
가. 부담금 신설	60
나. 부담금 운용	62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63
나. 보조사업 범위 확대	64

III. 기타 제·개정법률안

1.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률	65
2.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률	66
3. 통계법 및 관련 법률	67
4. 기타 법안	68

IV. 부표 72

표

표 I-1	국회 대수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발의 현황	8
표 I-2	분석 대상 법안	9
표 I-3	분석대상 법안의 법률별 비중	9
표 I-4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별 담당부서	10
표 I-5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률 유형 분류	11
표 I-6	유형별·개정대상 법률별 법안 수	13
표 I-7	소관국별 임기만료 폐기법안 비중	15
표 I-8	폐기법안의 제안자 수 비중	17
표 I-9	제안자 수 30인 이상 폐기법안	17
표 I-10	정당별 폐기법안 수	18
표 II-1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 주요 내용	20
표 II-2	신규 인지 예·결산서 관련 법과 조항	21
표 II-3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21
표 II-4	노동 및 경제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22
표 II-5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22
표 II-6	결산·성과 보고서 관련 법안 주요 내용	23
표 II-7	예·결산 운영 중 특정 비목의 사용 관련 법안 주요 내용	24
표 II-8	예·결산 운영 중 제도 변경 및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25
표 II-9	근거법 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주요 내용	26
표 II-10	현행법 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주요 내용	27
표 II-11	특별회계 운영 개선 법안 및 제정안 관련 주요 내용	27
표 II-12	일본 방사성오염수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28
표 II-13	재난안전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29
표 II-14	지역 내 시설, 복지, 산업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29
표 II-15	산업 지원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30
표 II-16	기타 지원 및 정책운영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30
표 II-17	현행법 개정 전제 신규 기금 설치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1
표 II-18	기금 운영방식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2
표 II-19	복권기금 수익금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3
표 II-20	복권기금 운영방식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4
표 II-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5
표 II-22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개선 및 기타 관련 법안 주요 내용	36
표 II-23	기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37
표 II-24	국유재산 관리제도 변경 법안 주요 내용	38

표 II-25	기타 국유재산 취득, 이용, 개발에 대한 변경 법안 주요 내용	39
표 II-26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주요 내용	40
표 II-27	기존 국유재산 특례 변경 법안 주요 내용	41
표 II-28	과학·기술·산업분야 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42
표 II-29	민간 공익단체·문화시설 및 기타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43
표 II-30	교육·보육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44
표 II-31	현존 기관 설치 근거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44
표 II-32	경영실적 평가 대상항목 추가 법안 주요 내용	45
표 II-33	경영평가 제도 개선 법안 주요 내용	46
표 II-34	경영공시 대상항목 추가 법안 주요 내용	47
표 II-35	임명한 대통령 임기 만료시 기관장 임기도 만료 간주하려는 법안	48
표 II-36	공공기관 채용제도 관련 법안 주요 내용	48
표 II-37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금지 관련 법안 주요 내용	49
표 II-38	공공기관 임직원 지원, 우대 등 기타 법안 주요 내용	49
표 II-39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확대 및 성과 활용 강화 법안	50
표 II-40	공공기관 자산처분시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50
표 II-4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명문화 법안 주요 내용	51
표 II-42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정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51
표 II-43	공공기관의 입찰 및 구매 기준 개정에 관한 법안 주요 내용	52
표 II-44	공공기관의 기타 운영 개정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52
표 II-45	공공기관의 정책 목표 변동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53
표 II-46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근거 마련에 대한 법안 주요내용	53
표 II-47	유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타 법안	54
표 II-48	공기업 민영화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 관련 제정안 주요 내용	55
표 II-49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관련 법안 주요 내용	56
표 II-50	계약제도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57
표 II-51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관련 법안 주요 내용	59
표 II-52	근거법 제정 전제 부담금 신설 법안 주요 내용	60
표 II-53	현행법 개정 전제 부담금 신설 법안 주요 내용	61
표 II-54	부담금 운용 관련 법안 주요 내용	62
표 II-55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법안 주요 내용	63
표 II-56	보조사업 범위 확대 법안 주요 내용	64
표 III-1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65
표 III-2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66

표 Ⅲ-3	통계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67
표 Ⅲ-4	기타 일부개정 법안 주요 내용	68
표 Ⅲ-5	기타 제정안 주요 내용	71

그림

그림 Ⅰ-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추이(제19~21대 국회)	8
그림 Ⅰ-2	주요 개정대상 법률별 분석대상 법안 건수 및 비중	14
그림 Ⅰ-3	소관국별 법안 비중	14
그림 Ⅰ-4	주요 시기별 분석대상 법안(재정분야 임기만료 폐기 법안)	15
그림 Ⅰ-5	분기별 유형별 임기만료 폐기법안 추이	16

부표

부표	기획재정부 소관법률별 주요 임기만료 폐기법안 내용	72
----	-----------------------------------	----

I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법안 현황

1.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기획재정위 소관은 총 2,370건으로 제20대 국회 2,119건 대비 251건(11.8%) 증가

- 발의된 법안 총 2,370건 중 조세분야 법안은 1,567건(66.1%), 경제·재정분야 및 기타 법안은 803건(33.9%)

〈표 1-1〉 국회 대수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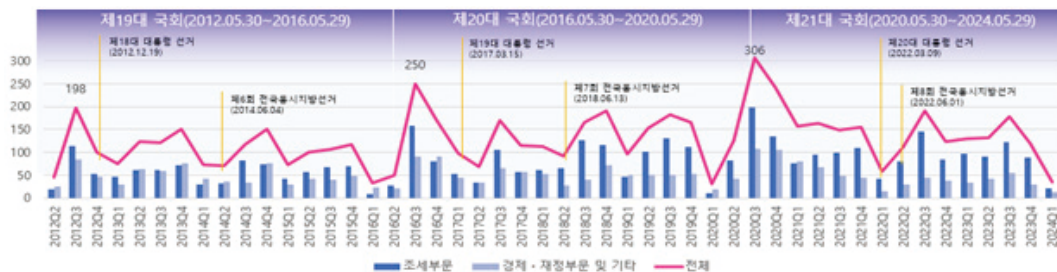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조세분야	경제·재정분야 및 기타
제19대 국회(2012.05.30~2016.05.29)	1,660건	899건	761건
제20대 국회(2016.05.30~2020.05.29)	2,119건	1,295건	824건
제21대 국회(2020.05.30~2024.05.29)	2,370건	1,567건	803건
합계	6,149건	3,761건	2,388건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finance.na.go.kr, 검색일: 2024.5.29.)

□ 국회 개원 직후 특히 법안 발의건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재정당국의 입법 대응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소관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 요구, 의견 조회 등에 따른 조사대상 자료 증가
 - 기재위 소관 법률안 발의 건수 : 제19대 1,660건, 제20대 2,119건, 제21대 2,370건

[그림 1-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추이(제19~21대 국회)



□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재정관련 법안에 대해 선제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당국 지원

- 직전 대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중 다수가 개원 직후 재발의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법안 현황

2. 분석 대상 및 유형 분류

FIS 재정리포트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폐기법안 분석

□ 기재부 소관법(78개) 대상 개정안과 기재위에 회부된 제정안 중 임기만료폐기 된 재정분야 법안 658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 기재부 소관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 (613건), 제정법안 (43건)
 - * 국가재정법(178건, 27.1%), 공공기관운영법(93건, 14.1%), 국유재산 특례제한법(63건, 9.6%)
 - ** 기재부 소관 법률이지만 조세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737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1-2〉 분석 대상 법안

분석 대상	건	%
합 계	658	100.0
기재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 중 임기만료 폐기법안	613	93.2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602	91.5
폐지 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6	0.9
기재위 외 기재부 소관 법안(배출권거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7	1.1
제정법안	43	6.5

〈표 1-3〉 분석대상 법안의 법률별 비중

법률명	건	%	법률명	건	%
국가재정법	178	27.1	담배사업법	14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3	14.1	통계법	13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3	9.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7.1	한국수출입은행법	9	1.4
한국은행법	26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6	0.9
부담금관리 기본법	23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	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	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	0.6
국가회계법	18	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0.6
국유재산법	17	2.6	외국환거래법	4	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	2.6	한국투자공사법	4	0.6
협동조합 기본법	15	2.3	기타	68	10.3

□ 분석 대상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석

- 개정대상 법률별, 제도별로 발의 시점, 배경 및 개정안 내용 분석
 - * 대상 제도 분류 예시 : (국가재정법) 인지 예·결산서 신규도입, 재정준칙 입법화
 - **개정안 내용 예시 : 청년인지 예·결산서,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표 1-4〉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별 담당부서

법령명	담당부서	법령명	담당부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발전략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재정성과평가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거시정책과	국가재정법	재정제도과	
한국은행법		국세기본법	조세법령운용과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홍보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국세징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정책총괄과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제도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세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도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협력과		농어촌특별세법
주한미군관세법	관세협력과	협동조합 기본법	지속가능경제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고과	담배사업법	출자관리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국가채권 관리법		개별소비세법	환경에너지세제과	
국고금 관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회계결산과	
한국조폐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제도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제과
귀속재산처리법			국제조세제도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소득세제과	
물품관리법			법인세제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도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국제기구과		금융세제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채법	국채과		재산세제과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증권거래세법	금융세제과	소득세법	금융세제과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획과		소득세제과	
한국수출입은행법	대외경제총괄과		재산세제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정책과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미래전략과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정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정책과		출자관리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인세제과	법인세법	법인세제과	
자산재평가법			국제조세제도과	

법령명	담당부서	법령명	담당부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총괄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인지세법	부가가치세제과		혁신조달기획과
임시수입부가세법	산업관세과	교육세법	금융세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기준과		환경에너지세제과
정부기업예산법	예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기후경제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예산총괄과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한국투자공사법	외화자금과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
외국환거래법	외환제도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재무경영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세제과		재정정보과
종합부동산세법		한국재정정보원법	

〈표 1-5〉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을 유형 분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74개)	내 용	
경제·재정부문 (46개)	• 경제교육지원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국가채권관리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관리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국채법 • 귀속재산처리법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담배사업법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품관리법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수입인자에 관한 법률 •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외국환거래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통계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한국은행법 • 한국재정정보원법 • 한국조폐공사법 • 한국투자공사법 • 협동조합 기본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74개)	내 용	
조세부문 (28개)	• 개별소비세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관세사법 • 교육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주한미군관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무사법 • 소득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산재평가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처벌 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finance.na.go.kr, 검색일: 2024.3.11.)

□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안 내용에 따라 법안 유형 분류

- 총 7개의 법률별 분류 아래 제안 내용의 유사성에 근거해 항목 분류
 - 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 ②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③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⑤ 부담금 관리 기본법,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⑦ 기타 제·개정법률안

3. 분석 대상 법안 구성 및 발의 추이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폐기법안 분석

□ 2장의 1절에서 다룬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 임기만료 폐기법안이 217건(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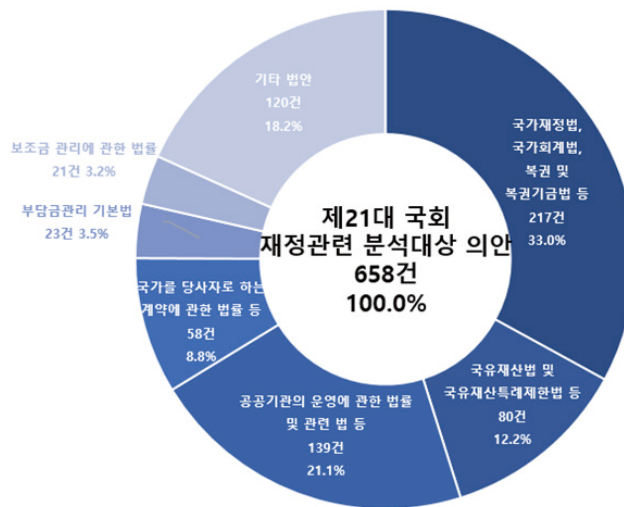
- 다음으로 3절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 139건(21.1%), 3장 기타 법안 120건(18.2%), 2장 2절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80건(12.2%) 순

〈표 1-6〉 유형별·개정대상 법률별 법안 수

목차	건	%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217	33.0
재정건전성	7	1.1
예·결산	61	9.3
특별회계 및 기금	107	16.3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42	6.4
2.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80	12.2
관리제도	17	2.6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63	9.6
3.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	139	21.1
경영공시 및 경영실적 평가	30	4.6
인사 및 운영	63	9.6
유관 공공기관 운영	39	5.9
민영화 및 기타 제정법안	7	1.1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58	8.8
계약제도 개선	47	7.1
조달 및 기타	11	1.7
5. 부담금관리 기본법	23	3.5
부담금 신설	21	3.2
부담금 운용	2	0.3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	3.2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11	1.7
보조사업 범위 확대	10	1.5
7. 기타 제·개정법률안	120	18.2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률	18	2.7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률	15	2.3
통계법 및 관련 법률	14	2.1
기타	73	11.1
합계	658	100.0

- 제안 내용 항목 중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법안이 107건(1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법안의 기타 73건(11.1%),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63건(9.6%), 공공기관 인사 및 운영 63건(9.6%), 예·결산 61건(9.3%) 순
-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법안은 주로 신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관련
- * 국가재정법 대상 신규 특별회계 설치 법안 18건, 신규 기금 설치 법안 66건으로 658건의 임기만료 폐기법안 중 84건(12.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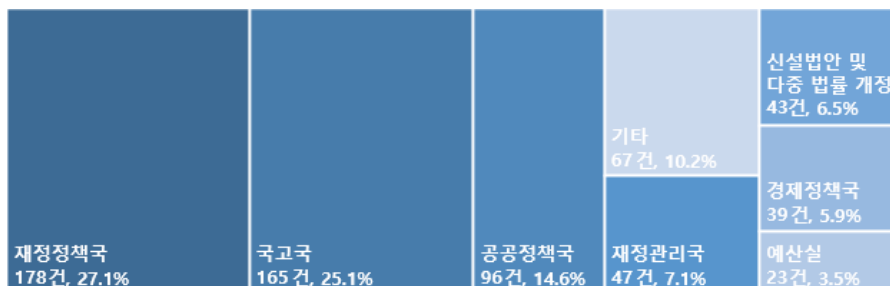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개정대상 법률별 분석대상 법안 건수 및 비중



□ 국가재정법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국 소관 법안 178건(27.1%)

- 13개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고국 소관 법안 165건(25.1%)
- 공공정책국 96건(14.6%), 재정관리국 47건(7.1%), 경제정책국 39건(5.9%) 순

[그림 1-3] 소관국별 법안 비중



〈표 1-7〉 소관국별 임기만료 폐기법안 비중

담당국	법률명	건	%	담당국	법률명	건	%
재정정책국	국가재정법	178	27.1	경제정책국		39	5.9
국고국		165	25.1		통계법	13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3	9.6		한국은행법	26	4.0
	국가계약법	47	7.1	예산실		23	3.5
	국유재산법	17	2.6		보조금법	20	3.0
	담배사업법	14	2.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3	0.5
	조달사업법	9	1.4	미래전략국		19	2.9
	국고금 관리법	3	0.5		배출권거래법	4	0.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	0.3		협동조합 기본법	15	2.3
	국가채권 관리법	2	0.3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법	17	2.6
	물품관리법	2	0.3	국제금융국		9	1.4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2	0.3		외국환거래법	4	0.6
	전자조달법	2	0.3		한국조폐공사법	1	0.2
	국채법	1	0.2		한국투자공사법	4	0.6
	회계관계직원책임법	1	0.2	대외경제국	한국수출입은행법	9	1.4
공공정책국		96	14.6	개발금융국		5	0.8
	공공기관운영법	93	14.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	0.2
	공기업구조개선법	3	0.5		물가안정법	4	0.6
재정관리국		47	7.1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지원법	2	0.3
	국가회계법	18	2.7	제정안 및 일괄개정법률안		43	6.5
	부담금관리 기본법	23	3.5	폐지법률		6	0.9
	민간투자법	6	0.9	합계		658	100.0

□ 분석대상 법안 기준 선거 전, 연말(11-12월) 발의 빈도 증가

- 월 평균 30.9건 발의, 국회 회기 전반기에 발의가 가장 활발한 모습
 - 조세분야는 월 평균 16.4건, 경제·재정분야는 월 평균 14.6건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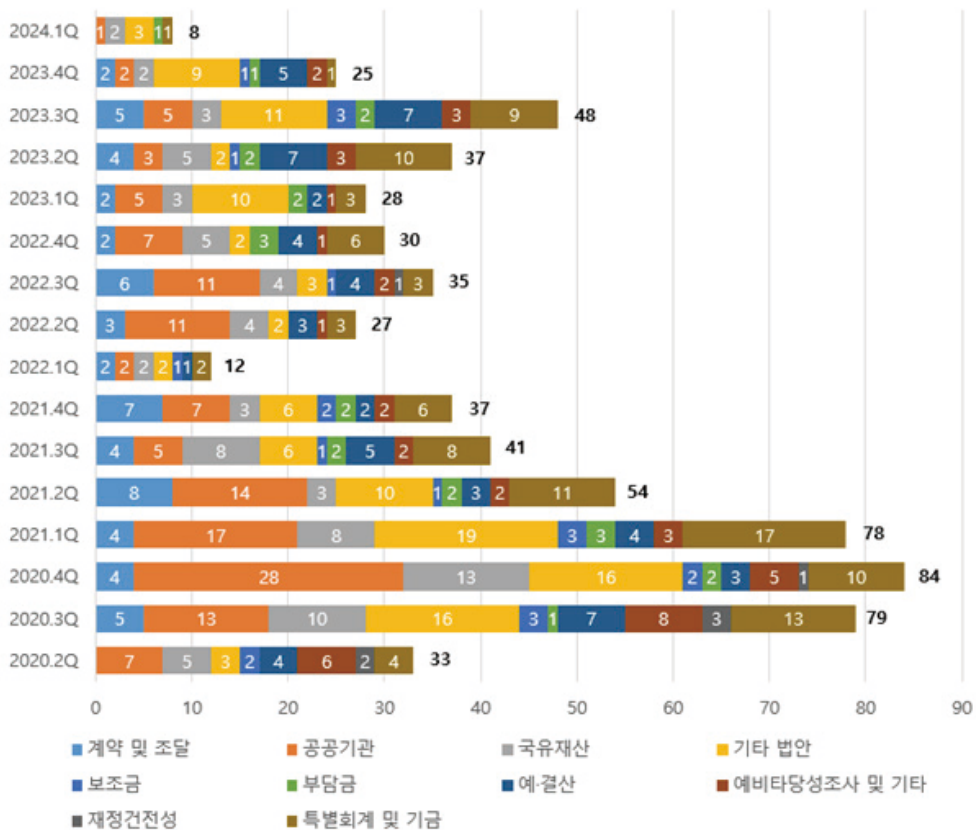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시기별 재정분야 임기만료 폐기 법안 발의건수



□ '21년 3분기까지 분석대상 법안 658건 중 56.1%인 369건 발의

- 해당 기간('21.3Q) 내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의 85.7%(6건) 발의
 - '21.2Q 기간 내 발의건수가 50% 이상인 유형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24건, 58.5%), 공공기관(79건, 57.2%), 기타 법안(64건, 53.3%), 보조금(11건, 52.4%), 특별회계 및 기금(55건, 51.4%)

[그림 1-5] 분기별 유형별 임기만료 폐기법안 추이



□ 분석대상 658건 중 38.3%가 제안자 10인 발의(252건)

- 제안자 30인 이상 발의 법안 15건(2.3%), 정부 발의 법안 7건(1.1%)
 - 국회법 제79조1항에 따라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표 1-8〉 폐기법안의 제안자 수 비중

제안자 수	법안 수	%	제안자 수	법안 수	%
10인	252	38.3	28인	1	0.2
11인	131	19.9	29인	1	0.2
12인	77	11.7	31인	1	0.2
13인	45	6.8	32인	1	0.2
14인	31	4.7	34인	2	0.3
15인	21	3.2	35인	2	0.3
16인	13	2.0	37인	1	0.2
17인	24	3.6	38인	1	0.2
18인	5	0.8	39인	1	0.2
19인	5	0.8	46인	1	0.2
20인	5	0.8	47인	1	0.2
21인	7	1.1	55인	2	0.3
22인	7	1.1	56인	1	0.2
23인	3	0.5	68인	1	0.2
25인	6	0.9	정부	7	1.1
27인	2	0.3	총합계	658	100.0

- 최대 제안자 수인 68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 관련 신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의원 다수 찬성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경우, 향후 재발의 가능성 높음

* 특정 사안에 따라 발의된 법안(원전 오염수, 재난안전 등), 꾸준히 논의되어 온 법안(재정건전성 등)에서 공동제안자 수가 큼

〈표 1-9〉 제안자 수 30인 이상 폐기법안

제안자 수	법안 수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주요 내용
31인	1	2108901	이용빈	(경영평가 대상항목 추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32인	1	2108855	윤주경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금지 관련 법안) 직원 징계 시효 연장
34인	2	2114655	오영환	(근거법 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2122748	장동혁	(지역 내 시설, 복지, 산업 관련 신규 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35인	2	2117428	박대출	(재정건전성)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3% 이내 유지 등
		2116574	서삼석	(공공기관의 기타 운영 개정)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제안자 수	법안 수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주요 내용
37인	1	2107886	우원식	(계약제도 개선) 공정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 의무 명시
38인	1	2122620	송재호	(일본 방사성오염수 관련 신규 기금)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39인	1	2120767	윤호중	(기타 제정안)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개발된 지표 및 지수 활용
46인	1	2124587	김주영	(공공기관 자산처분시 국회 통제권 강화) 150억 이상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47인	1	2124586	서영교	(공공기관 임직원 지원, 우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55인	2	2112738	유기홍	(근거법 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2125397	김성주	(현행법 개정 전제 부담금 신설)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56인	1	2108364	이용우	(기타 지원 및 정책운영 관련 신규 기금) 사회연대기금
68인	1	2114055	윤호중	(재난안전 관련 신규 기금 설치) 감염병긴급대응기금

〈표 1-10〉 정당별 폐기법안 수

(단위: 개, %)

총합계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부	기본소득당	무소속
658	425	3	159	39	3	10	7	6	4
(100.0)	(64.6)	(0.5)	(24.2)	(5.9)	(0.5)	(1.5)	(1.1)	(0.9)	(0.6)

* 발의 시점 소속정당 기준 : 더불어민주당(민), 열린민주당(열), 국민의힘(국), 미래통합당(미), 국민의당(국당), 정의당(정), 기본소득당(기), 무소속(무)

가. 재정건전성

□ 목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기존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 또는 재정건전화법을 새로 제정하여 국가재정 관리지표를 수치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 재정건전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 국가재정법 제5장(재정건전화) 내 조항 신설 및 개정
 - 재정건전성 관련 제정안에 및 이에 따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추진
 - * 독자적인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이에 연계하여 현행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재정준칙 설정 및 재정건전화 방안: 재정준칙 법적 근거 및 정책마련
 -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신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자원조달방안 첨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방안 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첨부,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실시,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유지 조항 등 신설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 등 신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자원조달방안 첨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 법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 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 정리
 -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 마련
- 재정건전화 관련 제정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전망 실시, 재정 정보 및 통계 수집·분석 의무 규정
 - 재정건전화 책무,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의무,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추계자료 및 자원조달방안 마련 의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개혁포상금 지급,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 정보 및 통계 실시간 공개 등의 내용

〈표 II-1〉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7428	국가재정법	박대출(국)	35인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 △3% 이내 유지,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2% 이내 유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여부 5년마다 재검토 등
2107025	재정건전화 법안	정부	정부	국가채무총액 및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5년마다 재검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세계잉여금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등
2101265		송언석(미)	10인	재정건전화법안 의결 전제 국가재정법 중복규정 정리
2101994		윤희숙(미)	11인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관리
2100229		추경호(미)	15인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100분의 3 이하로 유지 등
2101270		송언석(미)	10인	국가채무총액 비율 GDP대비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적자 GDP대비100분의 2 이하로 유지 등
2100096		류성걸(미)	11인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GDP대비 100분의 45을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등

나. 예·결산

1. 신규 인지 예·결산서

□ 목적: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 특성: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 발의
 -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신규 인지 예·결산 대상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 시 인지 예·결산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국가재정법 내 예산서, 결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내용 신설,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개정

〈표 II-2〉 신규 인지 예·결산서 관련 법과 조항

구분	내용	
국가재정법	-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56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인구: 저출산, 인구변화, 청년 관련 인지 예·결산서 법률안 발의
 - 예산·기금 편성 시 인구문제 및 사회변화에 대한 개선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인지 예·결산서를 도입하고자 함

〈표 II-3〉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2459	국가재정법	정일영(민)	11인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22460	국가회계법			
2110494	국가재정법	이종배(국)	10인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10496	국가회계법			
2121854	국가재정법	윤준병(민)	13인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21855	국가회계법			
2100493	국가재정법	윤호중(민)	17인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00497	국가회계법			
2108469	국가재정법	장경태(민)	10인	세대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03529	국가재정법	강훈식(민)	10인	
2101244	국가재정법	태영호(미)	11인	청년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01243	국가회계법			
2118579	국가재정법	이용빈(민)	12인	장애인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18580	국가회계법	이용빈(민)	12인	
2116790	국가회계법	최혜영(민)	10인	

- 노동 및 경제: 소득, 노동, 규제개혁 및 조세지출 관련 법안 발의
 - 소득불평등의 개선, 노동권 반영, 식량안보 확보, 규제개혁에 따른 영향,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의 목적에 따른 법안 제시

〈표 II-4〉 노동 및 경제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887	국가재정법	우원식(민)	14인	노동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24893	국가회계법			
2124908	국가재정법	김영진(민)	10인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24909	국가회계법			
2119828	국가재정법	김승남(민)	21인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19831	국가회계법			
2111704	국가재정법	이규민(민)	12인	조세지출예산서를 개별세법 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해 작성
2101665	국가재정법	김선교(미)	11인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01666	국가회계법			
2104270	국가재정법	조정훈(시)	17인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2104266	국가회계법			

• 지역 및 환경: 농어촌, 국가균형, 탄소 및 기후 관련 인지에산 도입

- 예산의 편성·집행 시 지역균형 및 농어촌 고려, 온실가스 감축효과뿐만 아닌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하고자 함

〈표 II-5〉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863	국가재정법	이소영(민)	13인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기후인지 예·결산서로 이름변경
2124862	국가회계법			
2121729	국가재정법	윤미향(무)	12인	농어촌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 및 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2121730	국가회계법			
2108943	국가재정법	맹성규(민)	17인	탄소감축성과예산서 신규 작성
2100720	국가재정법	전봉민(미)	10인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지역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균형인지 예산 신설
2100719	국가회계법			

2. 결산·성과 보고서

□ 목적: 결산·성과 보고서 상 정보 추가, 오류에 따른 조치 등 법안 발의

- 특성: 결산·성과 보고서 개선을 위한 관련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의 일부개정 및 신설 내용 법률안 발의
 - 결산·성과 보고서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신설
 - *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내 관련 내용 개정 및 신설
 - * 국가회계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내 관련 내용 개정 및 신설
 - 결산 관리·감독, 시정 필요성 등에 따른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신설
 - *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내 관련 내용 개정 및 신설
 - * 국가회계법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내 관련 내용 개정 및 신설
 - 향후 추가경정예산, 재무제표, 예산·결산 검토 등을 대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과 공개 및 보고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될 가능성
- 결산·성과 보고서: 예산의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내용 추가
 - 추가경정예산 발생에 따른 사업 성과 파악 필요성 발생에 따라 별도의 추경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추경예산 집행내역 파악 등 관련 내용 신설
 -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발생 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 교육의 실시,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 작성
 -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및 보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재정사업의 탄소감축성고가 예산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 포함

〈표 II-6〉 결산·성과 보고서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722	국가회계법	권명호(국)	13인	결산보고서 내 추경 집행내역 추가
2125708	국가재정법	권명호(국)	13인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별도 성과보고서 작성
2117100	국가회계법	홍성국(민)	17인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시정 방안 작성
2115049	국가재정법	양경숙(민)	10인	결산보고서 오류에 따라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2112322	국가재정법	이태규(국당)	10인	예산안 투명성 확보 및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2108948	국가회계법	맹성규(민)	18인	성과 보고서에 탄소 배출 영향력 고려

3. 예·결산 운영

□ 목적: 예·결산 운영을 위한 특정 비목의 사용, 제도 관리 등 법안 발의

- 특성: 특정 비목의 사용 및 투명성 관리, 제도의 변경 및 개선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관련조문 개정안으로서, 이후 유사법안 재발의 가능성 존재
 - 특수활동비, 예비비, 세계잉여금 등 특정 비목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비목에 대한 예산계획, 사용내역 공개 등 법률안 발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서류 제출, 법적 근거 마련, 일정 변경 등 예·결산 운영을 위한 제도의 변경 및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 특정 비목의 사용: 특정 비목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등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내 관련 내용 신설
 -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사용처 확대 등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내 관련 내용 신설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세계잉여금의 우선 사용 및 채무 상환 비율에 대한 내용 신설

〈표 II-7〉 예·결산 운영 중 특정 비목의 사용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415	장혜영(정)	14인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집행내역 제출
2126116	박용진(민)	17인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내역 공개
2117806	한병도(민)	10인	예비비 사용계획의 국회 제출
2117028	양경숙(민)	10인	예비비 사용내역 요구 및 제출 절차 개선
2115414	우원식(민)	15인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관련 제도 개선
2111857	이원욱(민)	10인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2112840	김두관(민)	13인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용 순서 간 우선순위 설정
2112244	태영호(국)	13인	국가 채무 상환시 세계잉여금 사용 최소 비율 100분의 50으로 상향

- 제도 변경 및 개선: 절차 개선, 제출서류 추가, 일정 변경 등의 법률안 발의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내 특정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 신설

-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내용 신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 포함,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 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 신설
-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 중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관련 추가서류 및 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 신설 및 변경
- 예산안편성지침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에 대한 내용 신설
- 정부의 수시배정,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시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률 명시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의 예외에 대한 내용 신설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절차 마련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로 강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 및 사유 보고, 국세감면율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 신설

〈표 II-8〉 예·결산 운영 중 제도 변경 및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5007	윤재갑(민)	10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반영하는 예산의 원칙 추가
2113861	주호영(국)	10인	준예산 집행절차 법률 규정
2110627	전봉민(국)	10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첨부서류 내용 추가
2104846	서병수(국)	12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2125196	진선미(민)	10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내용 추가, 품질진단 및 관리 실시
2124952	김승원(민)	10인	예산안 첨부자료 내 세수추계모형 포함, 국회제출 및 공개
2105072	류성걸(국)	10인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변경
2121477	노홍호(국)	12인	예산안편성지침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 결정 시 정보통신부장관 협의
2115447	윤영덕(민)	10인	정부의 수시배정,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에 대한 내용 신설
2116810	전용기(민)	14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률 명시,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
2111946	박주민(민)	13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명시적인 법적근거 신설
2117743	박영순(민)	11인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의 예외에 특허청 포함
2107629	송재호(민)	10인	현물출자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에 관한 내용 신설
2106086	류성걸(국)	10인	국세감면율 초과시 내역과 사유를 결산 국회에 제출

다. 특별회계 및 기금

1. 특별회계

□ 목적: 기존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신규법안 설치 후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 특성: 신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및 기존 특별회계의 효력연장 제안
 -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관련 특별회계 내용 추가
 - *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제24호의 신설
 - 기존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의 효력 일몰기한에 따른 연장 제안 발상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근거법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신규법안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발생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표 II-9〉 근거법 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5715	박대출(국)	13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122464	김희재(민)	13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114655	오영환(민)	34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법률안
2114890	변재일(민)	10인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12812	유의동(국)	11인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설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3098	이장섭(민)	10인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12738	유기홍(민)	55인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2110159	이상민(민)	11인	사회연대특별회계 설치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제정안)
2111211	김두관(민)	11인	기본자산특별회계 설치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
2108266	김형동(국)	16인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설치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2108734	용혜인(기)	11인	탄소세배당특별회계 설치	탄소세법안
2101913	정진석(국)	17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법 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기존 법률 또는 개정을 통해 발생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표 II-10〉 현행법 개정 전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24727	허영(민)	16인	담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532	신영대(민)	13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05574	소병훈(민)	10인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설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43	한기호(미)	2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68	유상범(미)	11인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82	장경태(민)	13인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세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회계 운영 개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연장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효력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제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 사회연대특별회계 설치, 운영사항 규정, 세입 및 세출 내용 규정

〈표 II-11〉 특별회계 운영 개선 법안 및 제정안 관련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17375	김병욱(국)	10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효력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110160	이상민(민)	11인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제정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제정안)

2. 기금

□ 목적: 특정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근거법 신설

- 특성: 재정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안 발생에 따라 관련 신규 및 특별법 제정 또는 현행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기금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은 [별표 2]에 열거된 법률에 한하여 기금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별표 2]에 새로운 호를 추가하려는 유형의 개정안 다수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제72호의 신설

- 근거법 제정 전제 신규 기금 설치: 신규법안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1차 방류 : 2023년 8월 24일)에 따른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규정 및 운용에 관한 내용 신설

〈표 II-12〉 일본 방사성오염수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3264	윤재갑(민)	12인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기금 설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24347	김주영(민)	10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24512	김병기(민)	11인	수산업피해지원기금 설치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24669	소병철(민)	13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24980	김원이(민)	10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22620	송재호(민)	38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22682	위성곤(민)	13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재난안전 관련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재난안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표 II-13〉 재난안전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12790	우원식(민)	20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대상 특별금융 지원 기금 설치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2114055	윤호중(민)	68인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8434	양경숙(민)	12인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 기금법안
2106203	오영환(민)	10인	국민안전 확보,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안전기본법안
2101651	김민석(민)	27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재난관리기금법안

- 지역 내 시설, 복지, 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제정과 기금 설치의 근거법 내용 신설

〈표 II-14〉 지역 내 시설, 복지, 산업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2305	신현영(민)	15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규정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2122729	주철현(민)	12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22748	장동혁(국)	34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2453	민형배(민)	10인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2110228	허영(민)	14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103711	여기구(민)	16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원마련 기금설치의 근거 마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산업 관련 지원 및 정책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제정과 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

〈표 II-15〉 산업 지원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4674	박범계(민)	10인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 설치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122378	김종민(민)	10인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18184	김희재(민)	10인	노후국가산업단지 지원 기금 설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118244	최형두(국)	11인	중소형원자로 개발 재원 설치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115688	김주영(민)	13인	해양레저특구 기금 설치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2113017	윤창현(국)	10인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2107560	김두관(민)	10인	통계산업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통계산업 진흥법안
2107647	김정호(민)	12인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 설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108489	김정재(국)	10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 설치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2104666	양이원영(민)	10인	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4991	장혜영(정)	10인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 발의)
2101884	윤호중(민)	15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발의)

- 기타 지원 및 정책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제정과 기금 설치의 근거법 내용 신설
-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재원 확보에 한국은행 순이익금 활용

〈표 II-16〉 기타 지원 및 정책운영 관련 신규 기금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6300	유정주(민)	10인	무용진흥기금 설치	무용진흥법안
2121779	김정호(민)	11인	우주항공청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122829	유기홍(민)	11인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2116794	최혜영(민)	10인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5506	이병훈(민)	17인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 설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112252	김미애(국)	11인	부모보험기금 설치	부모보험법안
2110166	하태경(국)	11인	아세안민주인권기금 설치	아세안인권기금법안
2108285	장경태(민)	12인	청년신용보증기금 설치	청년신용보증기금법
2108364	이용우(민)	56인	사회연대기금 설치	사회연대기금법안
2108426	양경숙(민)	12인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현행법 개정 전제 신규 기금 설치: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기금 설치의 근거법 내용 신설

〈표 II-17〉 현행법 개정 전제 신규 기금 설치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20791	홍성국(민)	17인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526	이성만(민)	11인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501	전해철(민)	10인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56	서정숙(국)	16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29	김두관(민)	10인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47	이종성(국)	10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182	용혜인(기)	11인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272	이수진(민)	15인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11889	김예지(국)	29인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531	민형배(민)	10인	정치발전기금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55	이상민(민)	10인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029	김민철(민)	17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73	강선우(민)	14인	아동복지기금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733	변재일(민)	10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996	김경만(민)	11인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703	안민석(민)	12인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579	이종성(국)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10	임호선(민)	10인	교통안전기금 설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15	김경만(민)	19인	동반성장기금 설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013	김병욱(미)	10인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지원기금 설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93	정성호(민)	10인	이민·통합기금 설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53	박정(민)	12인	창업공제사업기금 설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82	홍문표(국)	10인	불법어업활동 피해 어업인 지원기금 설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34	이종성(국)	11인	암관리기금 설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09	홍정민(민)	10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9	소병훈(민)	15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운영방식 개선: 자산운용지침 내용 개정, 기금운영 평가 등 기금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기금운용 평가 내 ESG 요소를 포함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 청년기본자산기금의 기금 특성 적용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국회 통제

〈표 II-18〉 기금 운영방식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1899	이낙연(민)	25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개선
2110492	이용우(민)	14인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대상에서 청년기본자산기금 제외
2108307	민형배(민)	12인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
2106825	민형배(민)	11인	기금운용 평가시 ESG 고려

3. 복권기금

□ 목적: 특정 기금 및 사업의 자원 확보와 운영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자원 확보 목적으로 복권수익금을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대부분이며, 기타 복권기금 운영에 대한 개선내용 발의
 - 특정 기금의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기금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려는 법률 제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 제2항 관련)
 - 특정 사업의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복권수익금의 사용가능 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려는 법률 제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 복권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사항 제시
- 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특정 기금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 신설
 - 기존 기금의 자원 확보 어려움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고자 함

- 신규 기금의 설치와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기금에 신규 기금을 추가하고자 함

• 수익금 사용가능 사업 추가: 특정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 대상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신설

- 기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업 이외에 복권수익금 배분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복권수익금 배분 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표 II-19〉 복권기금 수익금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23350	양경숙(민)	15인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가	-
2122828	유기홍(민)	11인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에 인문사회학술기금 추가	-
2110030	김민철(민)	14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추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74	강선우(민)	15인	아동복지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추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50	박정(민)	12인	창업공제사업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08	홍정민(민)	10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60	소병훈(민)	15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115844	김예지(국)	10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추가	-
2113580	윤후덕(민)	12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대한적십자사 사업 추가	-
2112240	최혜영(민)	10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업 추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77	김주영(민)	16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용자 지원사업 추가	-
2108112	양정숙(무)	10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양육비 대지급 사업 추가	-
2102528	이명수(미)	16인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

- 기금 운영방식 개선: 복권기금 운영에 대한 법률적 개선사항 제시
 -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설치
 - 복권 구매자의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표 II-20〉 복권기금 운영방식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787	기동민(민)	11인	복권기금 중요재산 공시
2117913	신동근(민)	10인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 금지
2110139	이상헌(민)	11인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106806	안병길(국)	12인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연장

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1. 예비타당성조사

□ 목적: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경제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현실화,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한 법률안
 - 향후 특정 사업의 균형발전, 경제성 입증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유사 법률안 지속적 제안 가능성 높음
 -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추가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의 현실화, 특정 사업 대상 평가 시 가중치 부여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경제성 평가 변경에 대한 법안
 -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1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적용 비율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교통, 보건 의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제외규정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신설
 - 교통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을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토균형개발과 교통 관련 문제로 인한 시급성, 경제적 타당성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보건 의료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을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공공성, 지역균형, 경제성 및 수익성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기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을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의 상향 필요성, 경제성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표 II-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6628	박진(국)	10인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5585	김영선(국)	11인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4491	김한정(민)	11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4660	윤두현(국)	21인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0012	김주영(민)	14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8436	최종윤(민)	10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100분의 80 이상인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2105764	안병길(국)	12인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규정 마련
2100324	조경태(미)	11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2467	이용빈(민)	25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3292	정정순(민)	10인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4465	강병원(민)	10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13342	고영인(민)	10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1839	강은미(정)	10인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21370	김남국(민)	17인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15624	구자근(국)	10인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첨단전략기술 관련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1405	김정재(미)	11인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2483	한기호(미)	22인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0414	김성원(미)	10인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준 개선 및 기타: 평가 대상의 기준 상향, 평가 가중치 조정, 규정 변경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 사항에 대한 법안 제안
 - 1999년에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상향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를 현실화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법률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관련 가중치 부여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 여부 반영, 예타 위탁, 면제 제도의 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 변경, 예타면제 적정성 평가의 보고절차 변경, 벌칙 신설, 규정 삭제 등 예타 기준 개선 및 기타 내용에 대한 법률안 제시

〈표 II-22〉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개선 및 기타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907	박덕홍(국)	10인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24900	이원택(민)	10인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2119214	박형수(국)	10인	사업규모가 큰 SOC사업 대상 총사업비 1천200억원, 재정지원 규모 7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16252	이종배(국)	10인	총사업비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12334	김윤덕(민)	10인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10905	류성걸(국)	10인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01248	김태흠(미)	11인	사회기반시설 대상 사업비 1천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00403	홍성국(민)	12인	사업 규모가 큰 SOC사업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00408	김상훈(미)	10인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2117043	이장섭(민)	19인	건설사업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 도입
2113340	이종배(국)	11인	비수도권지역 대규모사업 대상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추가 부여
2108044	황보승희(국)	11인	비수도권 건설사업 대상 지역균형발전 50% 가중치 추가 부여
2108815	구자근(국)	10인	비수도권 건설사업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 40% 가중치 추가 부여
2111305	윤준병(민)	12인	수도권 외 지역 평가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 고려
2110418	이병훈(민)	12인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 반영
2106541	이종배(국)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 강화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7125	이규민(민)	11인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2101606	권명호(미)	11인	예타 면제에 대한 적정성 판단 결과의 국회 보고
2102305	김경협(민)	13인	정책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2103520	김두관(민)	11인	예타의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 국무회의 확정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실시
2101144	박정(민)	11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신규 법률 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예타 규정 삭제
2101201	유동수(민)	10인	수요예측 부실에 대한 벌칙 신설

2. 기타 국가재정법 관련

□ 목적: 기타 국가재정법 내 변경·개선과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특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국회제출 서류, 기타 규정변경의 필요에 따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시
 - 민간투자 관련 국회제출 서류, 재정사업 조사연구 관련 제도 등 재정관련 기타 사항에 대한 법률안 제시

〈표 II-23〉 기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2675	박대출(국)	10인	국회 제출서류에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2104951	류성걸(국)	12인	국회 미제출, 비공개 조사연구 출연 지원금의 차년도 삭감 명시

가. 관리제도

□ 목적: 국유재산의 평가, 매각, 배상책임, 정책심의위 운영 등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국유재산법을 일부개정

- 특성: 매각 처분 관련 절차에 국회의 동의절차 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관리 기준 개정
 -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매각과 행정재산 처분에 국회의 동의 또는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
 - * 개정대상조문은 주로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처분의 제한) 등임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상향입법하여 근거마련
 -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시행령 위임규정 삭제
- 매각·처분 관련: 절차에 국회의 동의 또는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22년도 3분기~'23년도 1분기 집중 발의
 -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유재산 16조 규모 매각 계획 발표('22.9.) 직후 주로 발의
- 지자체 무상사용 관련: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령은 시행령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의 상세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

〈표 II-24〉 국유재산 관리제도 변경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9461	윤후덕(민)	10인	행정자산 처분시 절차에 국회 역할 추가
2117836	서영교(민)	11인	국유재산 매각시 국회 동의 절차 추가
2117287	이병훈(민)	12인	정책심의위원회 임명 및 매각 등에 있어 국회 권한 강화
2117359	신동근(민)	11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2117380	이수진(민)	12인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
2109237	안규백(민)	10인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상세를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 삭제
2104050	정청래(민)	11인	

- 기타: 국유재산 취득, 이용, 개발에 대한 절차 개선
 -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사유 추가 등
 - 국민이 국유재산 사용시 국유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

〈표 II-25〉 기타 국유재산 취득, 이용, 개발에 대한 변경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7315	정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지원
2113693	김태년(민)	14인	노후 학교건물에 한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사유 추가
2111713	이헌승(국)	11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등 명시
2111742	양경숙(민)	15인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은 타 일반재산에 우선해 처분
2112085	윤준병(민)	10인	국유재산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06906	전재수(민)	10인	대학회계로의 전출금 추가
2105159	이용우(민)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변경
2106112	권은희(국)	10인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중단
2106376	진성준(민)	10인	국가결산시기 조정(5.30.→5.15.)안 의결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제출기한도 이에 따라 조정
2100806	홍문표(미)	10인	국유재산 훼손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규정 마련

나.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1. 특례 확대 근거법 일부 개정

□ 목적: 타 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 해당 법 개정과 관련된 사업을 특례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특성: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표의 1호~216호(2022.1. 이전 222호)에서 국유재산이용상의 특례 대상을 관련법 조문·특례의 형태·기한과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
 - 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연계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업대상을 특례대상에 추가

* [별표] 217호 신설 (2022.1.이전 223호 신설)

- 별표에 기 규정된 특례 상의 적용조문을 연계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거나 특례의 형태를 확대

* 특례의 형태: 양여, 장기 사용, 사용료 감면

- 특례추가: 일부개정대상 법률이 현행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추가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도심 정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방군사시설, 국립문학박물관, 문화재조사연구단 법인, 에너지단지 입주기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 해녀탈의실 등의 수협 비영리사업,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공익단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정신재활시설, 희귀질환센터, 시니어클럽 및 학교, 숙련기술전수관

〈표 II-26〉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26159	노용호(국)	12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추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46	주호영(국)	10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607	진성준(민)	13인	국립항공박물관 추가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780	이소영(민)	12인	도심 정원 추가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22	홍영표(민)	2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쳐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설정	국방시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514	김용판(국)	13인	자율방범대 추가	자율방범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01	도종환(민)	10인	국립문학박물관 추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86	박정(민)	10인	문화재조사연구단 법인 추가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80	권인숙(민)	12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95	남인순(민)	11인	정신재활시설 추가	정신건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57	김영주(민)	11인	잡월드 내 숙련기술전수관 추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54	최종윤(민)	11인		
2103905	이원욱(민)	12인		
2107902	임호선(민)	11인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 사업 추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20	송재호(민)	10인	해녀탈의실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추가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80	한병도(민)	10인	국립희귀질환센터 추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284	허영(민)	14인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 추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62	문정복(민)	10인	시니어클럽의 사업 추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05	정청래(민)	10인	학교시설 지원 추가	학교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변경: 아래 6개 법안은 연계된 일부개정대상 법률이 별표에 기 수록되어 있어 적용대상 조문을 확장하거나 특례 형태를 변경
 - 특례적용대상 조문 확장
 - 사용료 등의 감면에 양여 또는 장기사용허가를 추가

〈표 II-27〉 기존 국유재산 특례 변경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개정안
2115084	김승수(국)	10인	연계개정안 제23조의 지방체육회의 사업까지 확대	국민체육법일부개정 법률안
2116032	조승래(민)	10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양여까지 확대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114828	서범수(국)	12인	연계 개정안 제34조 제1항의 폐지된 도시철도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대상에 추가	도시철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92	정성호(민)	12인	개정안 제21조의 2에 따른 부대시설까지 확대, 사용료 등의 감면과 장기사용허가로 확대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71	김성환(민)	28인	제26조에 따른 장기사용허가 등을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68	김원이(민)	18인	연계 개정안 제35조의 4에 따른 철도유휴부지 추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특례 확대 근거법 제정

□ 목적: 특별법 등의 근거법 제정을 발의하면서 이의 의결을 전제로 국유재산이용 특례를 확대

- 특성: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국유재산 이용 사업을 특례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
 - 현행법 [별표] 1호~216호(2021.9. 이전 222호)는 국유재산이용상의 특례 대상을 관련법 조문·특례의 형태·기한과 함께 명시하고 있음
 - * 별표 217호 신설 (2022.1.이전 223호 신설)
 - 과학·기술·산업 관련 일부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어, 관련 국유재산 특례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 존재
 -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안
 - 문화 체육 및 기타 연계 제정법안 일부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관련 국유재산 특례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 존재
 - * 민간해양구조대법률안, 자율방범대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법률안, 국립농업박물관법률안
- 과학·기술·산업: 신기술 개발 클러스터 및 지역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법 제정과 연계한 국유재산이용 특례 신설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이산화탄소 포집관련시설,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방사광 가속기 운영기관,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신설
- 한국청년경제인협회, 공공개방자원, 디지털역량센터 등 기타 공공시설 특례 신설

〈표 II-28〉 과학·기술·산업분야 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5717	박대출(국)	13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124345	김한정(민)	10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122463	김회재(민)	13인	남해안발전사업 대상 토지·건물 등 국유 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120184	이철규(국)	25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업과 그 지원시설 대상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118185	김회재(민)	10인	지역본사제 기업의 지역본사 사업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신설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115687	김주영(민)	13인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13604	서삼석(민)	17인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 국·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어촌·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3812	강병원(민)	11인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국유재산 무상 대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1594	변재일(민)	11인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의 국유 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0657	장경태(민)	11인	한국청년경제인협회 사업 대상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7423	강병원(민)	11인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로 감면 등	디지털포용법안
2107756	소병훈(민)	10인	공공개방자원 이용의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4547	이장섭(민)	10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 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2101485	신정훈(민)	18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103929	윤재옥(국)	10인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대부·매각 특례 규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공익단체·문화시설 및 기타: 공익적 목적의 단체나 국립 문화시설, 연구·행정기관, 기타 특별 구역 등에 대한 지원
 - 민간해양구조대, 자율방범대 등 민간 공익단체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 국립한국문학관, 서해수호희생자단체, 이순신재단, 국립농업박물관, 국립자연유산원 신설시 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 사회보험료징수공단, 국회영토영해연구원, 부동산관리감독기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시 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 폐철도부지, 평화경제특별구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대한 특별법 통과시 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표 II-29〉 민간 공익단체·문화시설 및 기타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2173	이명수(국)	10인	자율방범대 관련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22994	이달곤(국)	10인	민간해양구조대의 국유재산 무상 대여, 사용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18033	임오경(민)	10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적용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2111357	기동민(민)	10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 관련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적용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2107842	성일종(국)	10인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 관련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적용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2104687	김영진(민)	12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 전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이용허가	국립농업박물관법안
2105178	송영길(민)	10인	이순신재단 설립 관련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5472	양경숙(민)	10인	부동산감독원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105785	이명수(국)	13인	이순신재단 설립 전제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6356	노웅래(민)	11인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시 이에 대한 양여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2102722	이상헌(민)	14인	국립자연유산원 사업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100057	박정(민)	19인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및 무상 양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0200	이용호(미)	20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시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1112	김석기(미)	14인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육·보육: 정책방향에 따른 교육·보육 관련 기구 등 신설시 이에 대한 지원
 - 한국양육재단, 한국고등교육평가원, 해양교육문화재단, 온종일 돌봄체계 시설 설치 법안 통과시 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표 II-30〉 교육·보육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1435	서동용(민)	12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관련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등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2122831	장경태(민)	10인	한국양육재단 관련 국유재산 무상대부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110988	윤재갑(민)	10인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관련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66	강민정(열)	11인	돌봄시설 설치·운영시 국유·공유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00204	권철승(민)	11인	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현존 기관: 일부 현존 기관에 대해 현행 근거법과 독립된 단독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이 발의
되면서 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였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경찰병원,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

〈표 II-31〉 현존 기관 설치 근거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연계 제정안
2126030	정경희(국)	10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2111702	김수흥(민)	23인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관련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수익, 사용료 감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2077	이명수(국)	11인	국립경찰병원 대상 국유재산 무상대부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3. 기타

□ 현행 타 법에 국유재산특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상 특례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목적
 -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별표에 추가 (의안번호 2120447)

가. 경영평가 및 공시항목

1. 경영실적 평가

□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경영실적평가 시행시 고려할 대상을 추가하거나 평가결과 관리 강화

- 특성: ESG 관련 지표를 평가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이 많으며, 결과를 처벌, 성과급 환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안도 존재
 - 추가하고자 하는 평가대상 항목은 약 10여종이며, 대다수가 환경·사회 책임경영 등 항목과 소재 지역 발전 기여도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시 이들 지표가 우선 고려되도록 유도
- * 주된 개정대상 조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1항 및 제5항
 -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및 평가위원의 연속성 제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2항 및 제10항 등 개정
- 평가대상항목 추가: ESG관련항목, 지역발전, 협업 등의 항목을 경영평가지 고려할 보고서(§48①) 또는 사항(§48⑤ 각 호)에 추가하고자 함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항목,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지역균형발전 관련 항목
 - 기타 공공기관 간 협업 실적, 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채용현황

〈표 II-32〉 경영실적 평가 대상항목 추가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6680	송기헌(민)	13인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항목 추가
2120257	김민석(민)	10인	중증장애인상품우선구매제 이행실적 항목 추가
2116552	신영대(민)	10인	지역발전 기여도 항목 추가
2115215	송재호(민)	13인	지방은행 지정금융기관 선정 여부 항목 추가
2114518	이소영(민)	15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 항목 추가
2111904	이낙연(민)	25인	ESG 경영활동 항목 추가
2108351	여기구(민)	19인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 항목 추가
2108901	이용빈(민)	3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항목 추가
2109186	윤준병(민)	12인	기후변화 대응실적 항목 추가
2105156	신정훈(민)	15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항목 추가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6270	박정(민)	12인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항목 추가
2103377	이해식(민)	17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 추가
2103642	송언석(국)	11인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 항목 추가
2104186	신정훈(민)	14인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항목 추가
2100950	이용(미)	11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 추가

- 기타: 경쟁 실적 하락시 성과급 환수, 경쟁 위원의 재신임 근거 마련, 고객만족도조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결과 조작시 처벌

〈표 II-33〉 경영평가 제도 개선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6459	양경숙(민)	13인	경영평가단 위원 재신임 근거 마련
2113974	추경호(국)	16인	경쟁 실적 하락시 성과급 환수
2110863	안민석(민)	11인	고객만족도조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결과 조작시 처벌

2. 경영공시

□ 목적: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현황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하는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특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를 개정하여 경영공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이 11건으로 대부분
 -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으로는 사회적가치 및 ESG 경영에 관계된 항목과 공공기관의 청렴의무에 관계된 항목이 주를 이룸
 -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안 1건 존재
- *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의안번호 2118597, 김영주(민))

〈표 II-34〉 경영공시 대상항목 추가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3283	양경숙(민)	14인	기관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구분 공시
2118551	박주민(민)	10인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임금격차 공시
2112867	추경호(국)	10인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
2113897	신영대(민)	12인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이행결과 공시
2111883	홍정민(민)	10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 공시
2109850	홍익표(민)	11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공시
2110717	박광운(민)	10인	남녀고용평등 실태조사 결과 공시
2108555	이은주(정)	15인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 공시
2105841	장철민(민)	12인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상세히 공시
2106156	고영인(민)	12인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공시
2103453	송옥주(민)	14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 공시

나. 인사 및 운영

1. 인사

□ 기관장 임기 및 임직원 채용, 징계 등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특성: 기관장 임기 조정에 대한 법안, 채용 절차의 개선 및 징계나 우대에 관한 법안이 다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에 따라 이에 대한 법안이 '22년 3분기 ~'23년 1분기에 집중 발의(4건)
- 징계, 우대 관련해서는 '21년 4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강화 법안 집중 발의(5건)
-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게 함으로써 국정 수행기관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성 일치

〈표 II-35〉 임명한 대통령 임기 만료시 기관장 임기도 만료 간주하려는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9376	김주영(민)	10인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
2116646	오기형(민)	12인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
2116651	김두관(민)	13인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
2117040	김성환(민)	13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
2115868	정우택(국)	10인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
2104943	이원욱(민)	11인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

- 채용: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안
 - 임원 공모시 지원자격과 기관장 연임 요건 강화, 임기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모절차를 법제화 하는 법안 등
 - 직원채용계획 및 과정 개선
 - 지역인재 채용 및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

〈표 II-36〉 공공기관 채용제도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9730	이명수(국)	13인	기관장 감사 공모지원 자격요건 강화
2109860	김주영(민)	13인	임원후보자 재응모 불가, 연임조건 강화
2108834	이달곤(국)	12인	기관장 연임 조건 강화
2115769	정우택(국)	10인	차년도 직원채용계획 등 공시
2111739	이장섭(민)	10인	채용시험문제, 점수 등 공개
2101158	하태경(미)	22인	직원채용원칙 법제화
2100181	이종배(미)	12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2104952	류성걸(국)	12인	상임이사 감사 임기 조정, 비상임임원 겸직금지 규정 명문화
2107564	이종배(국)	10인	기관장 임명절차별 기한과 임기만료시 대적수행자를 명시하여 임명지연 방지

- 징계 및 금지: 임직원의 비위나 수사 사실에 대한 절차·처벌 강화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 비위시 징계 강화, 징계시효 연장 및 수사·조사시 소속 기관에 통보 의무 등 개정

〈표 II-37〉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금지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6238	이주환(국)	11인	직무와 무관한 수사 및 조사시에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116466	이태규(국)	10인	감사 또는 수사 결과 성과급 오지급시 환수
2109258	추경호(국)	11인	정치운동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2109739	이병훈(민)	12인	업무상 정보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시 처벌규정 신설
2108812	정일영(민)	17인	직무 관련 부동산 정보 이용시 수사, 처벌, 몰수
2108855	윤주경(국)	32인	직원 징계 시효 연장
2108974	송언석(국)	17인	비위행위자 범위 확대
2105209	이주환(국)	10인	임직원 비위시 퇴직급여 제한
2102566	임이자(미)	10인	징계 처분 공통사항 법제화, 채용비위 징계 시효 연장

- 지원 및 우대: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지원 또는 우대 신설
 - 다자녀 직원, 적극업무 추진 직원, 성폭력 피해 직원등에 대한 우대
- 기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여성임원 목표제 및 노동이사제 도입,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등

〈표 II-38〉 공공기관 임직원 지원, 우대 등 기타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586	서영교(민)	47인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2114689	이원욱(민)	12인	적극업무 추진한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 마련
2113680	우원식(민)	17인	여성임원 목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2108328	권인숙(민)	11인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수사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의무 유예
2105061	김선교(국)	10인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공공기관간 공통 기준 마련
2102563	정정순(민)	11인	다자녀 직원 우대

2. 재무관리

□ 목적: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확대하거나 자산처분·합병시 국회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변경하려는 법안

- 특성: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전성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당 의원이, 자산 매각의 국회동의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은 야당 의원이 주로 발의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확대를 위한 법안은 2021년 4월 여당 의원에 의해 4건이 집중 발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자산매각 국회동의 절차 추가 등 관리 강화 법안은 2022년도 6월 이후 야당 의원에 의해 4건이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등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확대 및 성과 활용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 및 폐기됨

-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을 확대하고 그 성과와 이행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

〈표 II-39〉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확대 및 성과 활용 강화 법안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9378	박성민(국)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2110207	박성민(국)	11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공공기관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주무기관장의 승인절차를 추가,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확대
2110544	이태규(국당)	11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공공기관 사채발행시 기재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추가,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확대
2110628	전봉민(국)	10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수립하게 하며, 이행보고서를 제출 및 경영평가와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

• 자산매각 국회동의: 공공기관이 자산·지분 매각시 보다 엄격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부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도록 함

- 자산 처분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 수 이상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표 II-40〉 공공기관 자산처분시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587	김주영(민)	46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성 강화 및 150억 이상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2119384	김희재(민)	10인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2118135	서영교(민)	11인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2117609	박영순(민)	10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자산처분계획 포함,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
2116184	이재명(민)	14인	기관통폐합 및 기능조정시 정부보유주식매각 또는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 국회상임위 보고 및 동의 절차

- 건전성 유지 의무 명문화: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재부장관·주무기관장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함을 명문화

〈표 II-4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명문화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6374	김주영(민)	10인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재무건전성개선계획,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 제출
2113353	김희재(민)	17인	공공기관에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 또는 주무기관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명문화
2110457	서영교(민)	10인	공공기관에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

- 예비타당성 조사: 제40조 제4항 제8호를 신설하거나 제4항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추가 또는 확대

〈표 II-42〉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정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6104	조승래(민)	10인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 사유를 일치
2120259	구자근(국)	12인	인천공사 해외투자사업 예타면제 위해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5055	정춘숙(민)	10인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5391	백종현(국)	10인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6274	서영석(민)	11인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2371	김주영(민)	15인	해외프로젝트금융투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103178	송갑석(민)	11인	해외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2101203	유동수(민)	11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3. 운영

□ 목적: 공공기관의 입찰 및 구매 요건과 회계, 운영원칙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입찰 구매: 입찰 제한 요건과 구매 수단 등을 변경, 명확화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

〈표 II-43〉 공공기관의 입찰 및 구매 기준 개정에 관한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9067	윤후덕(민)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법상 입찰자격 일치
2105068	정부	-	
2104724	박재호(민)	10인	상생협력법에 따른 입찰제한자는 공공기관에도 입찰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구매시에는 현금결제와 상생결제로 대금지급하도록 명문화
2101381	최승재(미)	17인	공공기관이 소재 인접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기타: 채식권 보장, 연구목적 공공기관 별도지침 수립 등 다양한 의견

〈표 II-44〉 공공기관의 기타 운영 개정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2872	양경숙(민)	10인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용어변경
2116574	서삼석(민)	35인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2117484	위성곤(민)	10인	채식권 보장 내용 명문화
2116073	신영대(민)	10인	국회 주관 공공기관장 협의회 개최
2113912	이영(국)	10인	4개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제외
2105525	이용우(민)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변경
2105158	강훈식(민)	11인	구분회계제도 확대
2103585	이상민(민)	10인	연구 관련 공공기관 별도 지침 수립
2100870	윤재옥(미)	14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 의무 설치

다. 기재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법

□ 목적: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의 정책목적, 운영, 사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

- 업무범위 확장: 한국은행법상 정책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이 2021년 다수 발의
 - 기후변화 대응, 고용안정 등을 정책목표에 추가 및 정책목표 계층화
 - 이외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투표용지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투표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법안

〈표 II-45〉 공공기관의 정책 목표 변동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195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민)	10인	통화정책목표에 기후변화위험관리 추가
2109551		양경숙(민)	11인	한은의 다양한 정책목표 계층화
2108438		김주영(민)	10인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부총재보 증원,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 및 요구권 강화
2105076		류성걸(국)	13인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금통위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추가
2104915		박광온(민)	10인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인구구조균형 고려 필요 명문화
2104647		김경협(민)	11인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2107913		김주영(민)	10인	지급결제제도 수행 근거 마련
2105572		양경숙(민)	11인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수행할 근거 마련
21063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민)	11인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추가
210454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	10인	업무범위에 투표용지 제작 추가

- 지방이전: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의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는 개별법상 조문을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다수 발의

〈표 II-46〉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근거 마련에 대한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22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민)	1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상향입법하여 전라북도로 정함
21158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민)	10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211589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민)	10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211517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국)	13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 개정
210524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민)	10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기타: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 총재 등 임원 임명 절차와 수출입은행의 투자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변화, 투자공사 육성재위탁 정책 등과 관계된 법안 등이 존재

〈표 II-47〉 유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타 법안

의안번호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076	한국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영선(국)	11인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근거 마련
2124907		양기대(민)	10인	화폐도안 저작권 법률로 규정
2122863		한병도(민)	11인	급여성 경비예산 범위 축소하여 기재부장관 승인 필요한 예산 범위 축소
2119019		신동근(민)	10인	제조순서에 따른 화폐 출고 순서를 법령화
2115167		서병수(국)	12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기존의 직을 사퇴해야 하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명확화
2115219		송재호(민)	12인	지방은행에 여신자금 지원 확대
2109738		고용진(민)	10인	순이익금 적립비율 30%에서 10%로 하향조정
2108750		김용판(국)	18인	화폐 훼손시에도 주화 훼손시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108931		박수영(국)	10인	정부로부터 국채 직접 인수 불가, 금통위 심의·의결 거쳐서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109138		박형수(국)	10인	정부로부터 국채 직접 인수 금지하되 차환시에만 직접인수 가능하도록 함
2109140		윤희숙(국)	17인	정부로부터 국채 직접 인수 금지
2105298		이용우(민)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
2105437		서병수(국)	12인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시행하도록 함
2106566		김도읍(국)	10인	한국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
2100093		윤호중(민)	10인	재난 발생시 영리기업 회사채 매입 등 긴급여신지원 근거 마련
2125149	한국 수출입 은행법 일부 개정안	김병욱(민)	13인	수출입은행이 차주에 신용공여시 한도 적용 예외 조항에 전시, 재난, 구매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 추가
2116354		김수흥(민)	11인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없이도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승인 간소화
2109133		이광재(민)	11인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신설
2106586		김도읍(국)	10인	수출입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
2102448		우원식(민)	21인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게 하는 근거 마련
2120528	한국 투자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홍성국(민)	21인	민간위원 자격요건 변경하여 투자 실무경력 추가
2118953		류성걸(국)	13인	폐지된 구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 조문 개정
2104790		김경협(민)	11인	육성재위탁 정책 확대

라. 민영화 및 기타 제정법안

□ 목적: 민영화 대상에서 특정기관을 제외하고자 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원칙 및 역할을 법제화 하고자 하는 법안

-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중 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2022년 2건, 2020년 1건 발의
- 제정안: 공공기관의 채용, 재정지출정보 통합관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 하려는 안

〈표 II-48〉 공기업 민영화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 관련 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제안자	제안자수	주요 내용
211895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류성걸(국)	12인	민영화 대상에서 기 민영화된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중공업주식회사 제외
2115714		이수진(민)	20인	민영화 대상에서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외
2101327		김주영(민)	12인	민영화 대상에서 가스공사 제외
2113569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민)	27인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2104744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민)	12인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통합 관리
210371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홍익표(민)	12인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2100001		박광온(민)	16인	

가. 계약제도 개선

□ 목적: 계약 입찰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계약 입찰참가 제한 사유와 낙찰자 선정 근거를 개선하고, 계약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 제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법률 개선안 제시
 - *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8조(입찰 공고 등),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5조(공동계약),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국가계약의 제도개선을 위한 개선안 제시
 - *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7조(계약의 방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5조(공동계약), 제26조(지체상금)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계약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낙찰자 선정에 대한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
 - 계약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추가, 확대하여 법률로 규정
 - 국가계약의 낙찰자 선정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표 II-49〉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446	박주민(민)	10인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2124557	이학영(민)	14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2124412	윤건영(민)	13인	환경영향평가서, 사업계획 협의내용 미반영자 입찰자격 제한
2123019	홍영표(민)	12인	정부 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의 계약 체결 제한
2116291	이정문(민)	12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자의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 입찰 참가 방지
2116294	소병훈(민)	11인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 영구적으로 입찰자격 제한
2115104	정청래(민)	10인	근로 강요 사용자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2115911	김정재(국)	10인	성폭력범죄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113303	구자근(국)	10인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9456	강민정(열)	11인	근로자 등에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
2109467	이해식(민)	13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2109797	장혜영(정)	11인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입찰 참가 제한
2109939	김주영(민)	10인	건강 및 안보 관련 적합 제품 인정 증명 서류 미제출자 입찰 참가 제한
2110722	강민정(열)	10인	근로관계 법령을 미준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2110877	김성원(국)	13인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
2105080	정부	-	기타 법률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 당연 제한
2102693	정춘숙(민)	10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미이행에 따른 벌점 초과자
2113316	김정재(국)	10인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종합 심사
2113989	김경만(민)	15인	공공조달 정책의 품질중심·적정가격 보장
2114017	박대출(국)	10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2114045	김민기(민)	10인	복지수요 물품 계약 시 예산의 범위 내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
2112082	김병주(민)	13인	군수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2105451	양경숙(민)	11인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고려

• 제도개선: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계약 절차, 내용,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

〈표 II-50〉 계약제도 개선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609	윤영석(국)	10인	물가변동분에 연동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2123573	양기대(민)	11인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고정불가
2124695	장철민(민)	11인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시 전문기관 감독·검사, 준공검사 의무화
2122110	김용민(민)	10인	예정가격 100분의10 초과시 심의위원회 심의, 소속기관장 승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2122371	신동근(민)	10인	발주기관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활용 근거 마련
2119818	송언석(국)	11인	장기계속계약 계약기간 약정, 계약상대방 미책임 사업 지연시 기간연장, 금액 조정
2118446	김수홍(민)	10인	장기계속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총계약기간 변경 포함
2118996	류호정(정)	10인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의무 준수, 위반 및 처벌시 계약 해제·해지
2116247	강기윤(국)	10인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 반영
2116536	이성만(민)	11인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법률 상향, 비공개 사유 제출, 정보 공개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6161	김영진(민)	10인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법률 상향, 비공개 사유 분기별로 공시 및 소관상임위 제출
2114640	민형배(민)	10인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2113354	서일준(국)	16인	물품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 도입 우선 검토
2114003	김경만(민)	15인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 공사계약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부계약자 시공 30%이상 참여
2112088	윤준병(민)	10인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지체상금 납부 결제수단 선정
2107886	우원식(민)	37인	공정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 의무 명시
2108032	이광재(민)	11인	경쟁입찰의 사전심사 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 포함
2108648	김주영(민)	16인	국가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근로자 보호 포함
2109091	김승원(민)	16인	수계약 약 조건 미충족 시 진행불가, 위반 시 처벌, 수계약 체결 시 공개
2106034	진선미(민)	12인	계약금액 및 기간연장 근거 마련, 계약변경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 명시
2101357	박주민(민)	14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에 포함, 고용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2101383	최승재(미)	17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 체결
2102050	홍익표(민)	13인	정부조달협정문 적용예외사유 법률상향, 국제입찰 적용예외사유 해당여부 우선 검토
2103196	정희용(미)	10인	대통령령 수계약 주요 조건 규정, 수계약 대상범위에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고려

나. 조달 및 기타

□ 목적: 조달 및 전자조달 관련 개선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비촉물자, 시스템 운영 등 지속적인 개정법안 발생
- 비촉물자, 벌칙, 사회적 책임 및 ESG, 우선구매 관련 법률안 개정
 - * 조달사업법¹⁾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29조(비촉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전자조달 지원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안 개정
 - * 전자조달법²⁾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조달 및 기타: 조달사업 운영 및 전자조달 관련 법안

- 조달사업 관련 계약, 벌칙 규정 등 개정 법률안 제안

- 전자조달시스템 기록·관리,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법률안

〈표 II-51〉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3520	문정복(민)	12인	조달물자 결함 발생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121108	류성걸(국)	11인	이용업체의 비촉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2116246	강기윤(국)	10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 신설
2117192	이인영(민)	11인	공공기관 등의 금전 목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으로 규정
2114647	이병훈(민)	11인	비촉물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2111897	이낙연(민)	25인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2112331	이용선(민)	10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ESG 요소 의무적 고려
2110629	서일준(국)	11인	국민 안전, 동식물 보호를 위해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 체결
2106466	한준호(민)	14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2121064	전봉민(국)	10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사항 기록·관리
2111012	권명호(국)	10인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

가. 부담금 신설

1. 근거법 제정 전제

□ 목적: 근거법 제정을 전제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설치 근거 법률 마련

- 특성: 향후 에너지·환경, 산업 관련 부담금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에 따라 해당 법의 별표에 신규 법률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에너지·환경, 산업 관련 부담금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법안 지속적 발의
 - * 에너지·환경, 산업 관련 법 제정 수요가 높아, 관련사업 대상 부담금 설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환경: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설치에 대한 법률안 발의
 - 발전용 원자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등 관련 부담금 설치
- 산업·기타 산업 및 기타 관련 부담금 설치에 대한 법률안 발의
 -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 카지노사업자,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자 등 관련 부담금 설치

〈표 II-52〉 근거법 제정 전제 부담금 신설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8245	최형두(국)	11인	중소형원자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신설
2118336	김영식(국)	22인	선진소형원자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신설
2113566	송옥주(민)	10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2108490	김정재(국)	10인	이산화탄소배출 부담금 부과,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
2104665	양이원영(민)	10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 기금 근거 마련,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
2122377	김종민(민)	10인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근거 추가
2110225	허영(민)	14인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 출입자 대상 부담금 신설
2107788	김영배(민)	20인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

2. 현행법 개정 전제

□ 목적: 현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설치 근거 마련

- 특성: 향후 지역·환경, 지원 및 기타 부담금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환경오염 대응, 청년, 피해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 신설 추진
 - *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환경적 상황의 대응 및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신설 법안이 꾸준히 제기될 것
- 지역 및 환경: 기피시설 설치 지역의 지원 및 사용자의 책임부담 필요성에 따른 부담금 설치
 - 폐기물 사용 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주변지역 지원 목적
 - 유역별 물관리, 제주도, 소음대책지역 등 환경 관련 부담금 설치
- 지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한 부담금 및 기타
 - 국가유공자 및 청년취업 증진을 위한 부담금
 - 출판 및 해운산업 등 특정 산업 증진을 위한 부담금
 - 사고 및 피해구제 관련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

〈표 II-53〉 현행법 개정 전제 부담금 신설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3364	신정훈(민)	11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대상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2122759	임이자(국)	10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업자 대상 주변지역지원부담금
2124725	허영(민)	15인	유역관리기금 재원으로 해서 취수부담금 설치
2114104	위성곤(민)	10인	제주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 이용 입도자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2107317	김정호(민)	14인	소음대책지역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대상 소음부담금 신설
2125397	김성주(민)	55인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2119655	김영주(민)	10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청년 고용부담금 신설
2119942	윤준병(민)	11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 신설
2118826	김두관(민)	10인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위한 부과금 신설
2111344	남인순(민)	12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 추가
2112441	윤주경(국)	11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 부과
2106003	김원이(민)	10인	의료기기 제조사 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2104329	여기구(민)	10인	해상운송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대상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징수

나. 부담금 운용

□ 목적: 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특성: 행정상의 미비점 개선, 귀속주체 또는 귀속비율의 변경 등 기존 부담금의 내용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시
 - 향후 부담금 대상 행정적, 법률적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 발생 가능
- 제도개선: 부담금 운영상 미비점 개선, 법적 근거 추가내용 반영
 - 행정부담 경감,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표 II-54〉 부담금 운용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6307	정부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통합 관리
2110039	박완주(민)	11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 목적: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시

- 특성: 보조사업자, 보고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 정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 확대와 오류, 누락에 대한 절차 마련,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법안 제시
 - *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 보조금 지급 계획, 수령, 환수 등 관련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제시
 - * 보조금법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보조금 정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운영방식 보완을 통한 보조금 절차 개선
 - 정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투명성 제고, 제출 의무자 확대
 - 보조금 환수, 사업자 선정 관련 사전 공지, 포괄보조금 제도, 사업계획의 협의, 감사인 선임 비용 등 보조금 절차 개선 등의 내용

〈표 II-55〉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3390	박성민(국)	11인	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2124326	김주영(민)	10인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벌칙 부과
2124638	김용판(국)	12인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시법 위반행위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2114013	김주영(민)	10인	소규모 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추가
2104079	이양수(국)	11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 강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보조금 금액 5억원으로 하향조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00636	송언석(미)	11인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하향조정, 제출 의무자 확대
2125523	하태경(국)	12인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 범위 내 지출, 회계 관리 교육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9545	박홍근(민)	10인	복지분야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2107779	이해식(민)	12인	국가전략적 필요 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거 신설
2108053	최연숙(국당)	10인	보조금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전 공지, 변경 불가
2105653	김영배(민)	14인	중앙관서 장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금 예산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명시

나. 보조사업 범위 확대

□ 목적: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신규 국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법률안 마련

- 특성: 관련 법률에 대상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준보조율을 변경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정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국고보조 확대: 보조사업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율을 조정하여 보조금액 확대 법안 제시
 - 보조금 대상 사업 추가, 기준보조율 조정을 통한 보조금 규모 확대
 - 특정 보조사업에 대상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범위 확대
 - 보조금 반환 예외 사항 적용, 신규 보조금 마련을 통한 추가 지원

〈표 II-56〉 보조사업 범위 확대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1654	소병훈(민)	11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 추가
2117039	하영제(국)	10인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및 고령화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2114778	유정주(민)	17인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재해 등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반환예외 적용
2111858	서삼석(민)	12인	농업재해 방지·극복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사업 대상 국고보조율 50%까지 지원
2107135	신현영(민)	19인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조사업 대상 우대 보조율 적용
2105634	이종배(국)	12인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
2102266	김원이(민)	11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 적용
2102654	서삼석(민)	18인	농어촌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 적용
2101102	정춘숙(민)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자립정착금 국고 지원
2112789	우원식(민)	22인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제정안):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대상 특별금융 지원



1.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률

□ 목적: 협동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특성: 공제사업 실시, 운영절차 개선, 처벌관련 사항, 구매 의무화, 용어 변경 등을 위한 법안 제시
 - 협동조합 기본법 대상 정책 운영개선 관련 일부개정안 제시
 -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대상 정책 운영개선 관련 일부개정안 제시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분리하는 제정안 존재

〈표 Ⅲ-1〉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5261	진선미(민)	10인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125278	진선미(민)	11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2123216	김영선(국)	11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 신설
2122855	신동근(민)	10인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 지원
2119422	김용민(민)	11인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범위 확대
2118240	서영교(민)	14인	상호부조 목적 공제사업 실시, 상호부조사업 납입 출자금 한도 내 규제 삭제
2116770	송갑석(민)	10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
2114764	위성곤(민)	10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익증진 사업 생산물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2112743	김정호(민)	11인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2107219	정부	-	변경신고 대상 축소, 신고 부담 완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의결권 행사
2109052	이용호(국)	11인	종합적인 협동조합 시책 수립·시행,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105300	이용우(민)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대표로 용어 변경
2107098	고용진(민)	11인	총회 원격영상회의, 임원선출 자격 확대
2102949	정성호(민)	15인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
2103391	김원이(민)	14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
2119425	김용민(민)	11인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범위 확대
2110923	윤준병(민)	12인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우리말 표현인 '사진·영상'으로 개정
2108691	이학영(민)	17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관련 규정에서 분리



기타 제·개정법률안

2.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률

□ 목적: 담배의 판매운영 관리, 유해성 관련 조치와 관련한 법안 제시

- 특성: 제조방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담배에 대한 관리, 유해물질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경고문구 규정 근거 마련
 - 향후 다양한 신종 담배류 제조, 판매, 운영에 대한 관리와 신종 담배류의 유해성, 결함에 대한 신규 규정 등 법률안 개정 가능성 존재
-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등
- 판매운영 관리: 담배 제조 및 판매 관리, 금지 규정 법률안 제시
 - 담배의 정의 변경,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 조항의 법적 근거 마련
 - 판매 규정 및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행정 및 기타 법적 근거 마련
- 유해성 관련 조치: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및 결함 규정 근거 마련
 - 담배 첨가물, 배출물의 유해성분 공개,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결함에 대한 규정 확대 등 법률안 제시

〈표 Ⅲ-2〉 담배사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4631	한병도(민)	10인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 관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 금지
2110473	김예지(국)	10인	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2101652	최혜영(민)	17인	연초의 줄기, 뿌리 담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규제
2101885	김수흥(민)	10인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 금지
2102273	정춘숙(민)	10인	연초 줄기·뿌리담배 규제,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2104007	김수흥(민)	13인	가향물질 캡슐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2116546	김경만(민)	10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법률 상향,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로 규정
2107360	김선교(국)	10인	소매인 재지정 시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 승계
2107854	고영인(민)	11인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규제 단속 주체 일원화
2108863	김수흥(민)	11인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매년 1회 실시 의무화, 제재 및 처벌 강화
2103679	윤영석(국)	11인	담배 광고내용을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하도록 명시
2121036	류성걸(국)	12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공개
2109940	양경숙(민)	11인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2107013	이종배(국)	10인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 포장지에 경고문구 표시
2112794	강선우(민)	10인	담배책임법안(제정안): 담배의 결함을 기존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

□ 목적: 통계청 관련 규정, 통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특성: 통계청 격상, 인사, 정보 공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 제언
 - 통계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청 격상, 인사조정 관련 법률안 발의
 - * 통계법 제3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등
 - 통계의 투명한 공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 발의
 - * 통계법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14조(국제협력), 22조(표준분류), 27조(통계의 공표), 39조(벌칙) 등
- 기관운영: 통계청의 격상 및 청장임기 규정, 통계작성기관 취소 시의 절차 규정 등 법률안 제시
 - 통계청 격상에 따른 행정절차의 규정, 지정기관 취소 관련 절차 신설
- 통계관리: 공개, 작성, 공표 등 통계관리 법적 근거 수립
 - 통계 공개의 투명성, 적시성, 객관성 관리 및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 제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
 -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

〈표 III-3〉 통계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20693	민형배(민)	10인	통계청장 임기(3년),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 신설
2119302	유경준(국)	10인	통계데이터처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
2119330	이수진(민)	12인	통계데이터처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적격성 검증절차 거쳐 임명
2110997	권명호(국)	10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2124020	조정식(민)	11인	공표 전 통계 제공 가능 기관 범위 한정, 제공 사유 의무 기록
2124896	김영진(민)	10인	통계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120311	이상현(민)	10인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 참고 및 반영 여부 결정
2114174	서일준(국)	14인	국제표준분류 미소속 국내 산업 대상 분류코드 규정 등
2112488	이주환(국)	10인	통계관련 처벌 수준의 상향조정
2110018	양정숙(무)	10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제출 자료 활용 통계의 현행 규정 삭제
2107509	서병수(국)	11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3이상) 요구 시 통계청장의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의무화
2108529	추경호(국)	11인	통계 사전 제공 시 공표예정 전일 증권 정구시장 종료 후 제공
2103497	김홍걸(민)	22인	북한 관련 통계 수집·작성 및 관리, 협력 사업 수행
2107559	김두관(민)	10인	통계산업 진흥법안(제정안): 통계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가. 일부개정

□ 목적: 기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대상 개정안 제시

-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과정 내용 보완 및 운영방법 개선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운영규정 변경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조사업 및 계정 추가 설치 등 내용 보완
- 국가채권 관리법: 보고자료 기한 설정, 감면절차 개선
-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 및 절차에 관한 내용 개선
- 국채법: 특정 목적의 재정사업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 마련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 개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정책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안 개정
- 물품관리법: 물품관리의 투명성 제고, 절차 개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 변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관련 정책 지원, 규정 및 절차 개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보완 및 개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변상책임 정책 개선

〈표 III-4〉 기타 일부개정 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개정 대상 법률
2125947	조명희(국)	22인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 포함	경제교육 지원법
2105744	태영호(국)	16인	사회 약자 경제교육 보완, 관계기관 협력 강화	
2106557	조명희(국)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2104358	태영호(국)	10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 제외	
2116005	장철민(민)	11인	지역자율계정 세출에 지역 교육격차 해소 사업 보조 추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109439	정점식(국)	10인	특별회계 보조 사항에 대중교통 포함	
2110229	허영(민)	14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 설치	
2107790	김영배(민)	20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내용 추가	
2100859	김영진(민)	10인	특례시계정 신설	
2101139	한병도(민)	23인	지역자율계정 세입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 포함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개정 대상 법률
2104446	김경협(민)	12인	부당한 공권력 행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채무 감면	국가채권 관리법
2106378	진성준(민)	10인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5월 31일) 일치	
2126296	김상훈(국)	10인	일시 보유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	국고금 관리법
2125423	장혜영(정)	14인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시에도 관련 증빙 의무화	
2106377	진성준(민)	10인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기한 기존과 동일 적용	
2104337	박광운(민)	10인	국민연금기금 자금 확보를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	국채법
2106584	김도읍(국)	10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2125586	양이원영(민)	11인	공공요금 결정,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를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125900	황희(민)	11인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2120107	김윤덕(민)	13인	공공요금자문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2112086	윤준병(민)	10인	과징금 납부 방법 명시	
2108568	박광운(민)	12인	불용품 양여시 용도, 양여대상자, 사유 등 공개	물품관리법
2106382	진성준(민)	10인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회 제출시기 기존과 동일 적용	
2114875	김두관(민)	10인	민간투자사업 정보 투명성 법률에 규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12554	안병길(국)	12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조사의 단축	
2108491	정성호(민)	12인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	
2108951	김도읍(국)	12인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	
2106464	한준호(민)	14인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한글표현인 ‘지급’으로 변경	
2106558	김도읍(국)	10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 관리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2124279	양이원영(민)	11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124378	우원식(민)	13인	상쇄 배출권 한도 제한	
2122251	민형배(민)	11인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2108474	김성원(국)	10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 규정	
2125370	정부	-	고객외국환증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	외국환 거래법
2125545	박대출(국)	12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유통 지원	
2116394	용혜인(기)	11인	외환 지급절차 중 허가 필요 요건에 전범범죄 등 추가	
2112087	윤준병(민)	10인	과징금 납부 방법을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명시	
2123912	민홍철(민)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의무 명문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2124342	민홍철(민)	11인	혁신도시 시책 추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균형적 배분, 지역균형발전 고려	
2124510	윤창현(국)	10인	인구감소관심지역 규정	
2113731	하영제(국)	10인	변상책임시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고려	회계관계직원 책임법

나. 기타 제정안

□ 목적: 사회적경제, ESG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제정안 발의

- 세금: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세금 도입안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마련을 목적으로 세목 신설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 제도화
- ESG: 정부 및 기업의 ESG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SG 법적 근거, 책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
-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재산권: 재산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 일제강점하 피해보상 및 재산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 기타: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일괄개정 법률안 제시 등
 - 민영화, 기본자산 및 기본소득, 재정정보 등 관련 신규 법률안 제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에 대하여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
 -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
 -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 기본권 보장
 -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용어변경하여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 확보

〈표 Ⅲ-5〉 기타 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19131	기동민(민)	15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한 탄소세 제도 신설
2108732	용혜인(기)	13인	탄소세 신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력적 탄소세 세율 마련
2108733	용혜인(기)	11인	탄소세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
2113332	용혜인(기)	10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신설,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

의안번호	대표제안자	제안자 수	주요 내용
2109855	심상정(정)	11인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 촉진, 토지 투기 방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 환수
2110157	이상민(민)	11인	사회안전망 구축 목적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2108287	장경태(민)	13인	청년세법 제정,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 마련
2104663	김영배(민)	21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2104988	장혜영(정)	10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도화
2105051	양경숙(민)	10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정착
2101880	윤호중(민)	15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2102535	강병원(민)	14인	중앙정부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 마련
2125328	조해진(국)	10인	ESG 입법 규제 대응, 중소기업 지원, ESG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2124147	정태호(민)	15인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
2124164	이원욱(민)	25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법 제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2105550	류성걸(국)	10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심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운영
2101398	이원욱(민)	12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2101441	추경호(미)	16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운영,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 강화
2107782	서병수(국)	21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법적 근거 마련
2108485	장경태(민)	10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2120667	장혜영(정)	10인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 마련
2120767	윤호중(민)	39인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개발된 지표 및 지수 활용
2111345	기동민(민)	10인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통합적 규율,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2111210	김두관(민)	11인	기본자산제도 법률 제정,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실현, 자산형성기회 사회적 격차 해소
2102377	태영호(미)	10인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 법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2103111	송언석(미)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
2101156	성일종(미)	12인	5년마다 기본소득의 도입 연구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 설립
2114162	소병철(민)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정비
2115322	이종성(국)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내 “심신장애” 표현 일괄 개정
2113363	박주민(민)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의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원칙적 금지
2126428	김도읍(국)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피한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
2126350	김도읍(국)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피한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

IV

부표: 기획재정부 소관법률별 제21대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법안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1-1. 재정건전성(7)		
국가재정법 (5)	재정건전성 (7)	•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3% 이내 유지,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 △2% 이내 유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여부 5년마다 재검토 등
		•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관리
		• 재정건전화법안 의결 전제 국가재정법 중복규정 정리
		•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3% 이하로 유지 등
		• 국가채무총액 및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물결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5년마다 재검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세계잉여금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등
재정건전화 법안(2) 제정안		• 국가채무총액 비율 GDP대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2% 이하로 유지 등
		•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GDP대비 45%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2% 이하로 유지 등
1-2. 예·결산(61)		
국가재정법 (43) 재정건전화 법안(2) 제정안	신규 인지 예·결산서 (18)	정일영(민) •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 분석·평가
		이종배(국) •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윤준병(민)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윤호중(민) •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 분석,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 확인
		강훈식(민) • 세대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 미리 분석
	인구 (8)	장경태(민) • 세대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 분석,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태영호(미) • 청년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 분석, 청년의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이용빈(민) • 장대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편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우원식(민) • 노동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 분석, 국가적 노동 시간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김영진(민) •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 분석,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재정건전화 법안(2) 제정안	노동 및 경제 (6)	김승남(민) • 식량자금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
		이규민(민) • 조세특례제한법안 아니라 개별세법 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김신교(미) •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조정훈(시) •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 발의 시점 소속 정당 기준 : 더불어민주당(민), 열린민주당(열), 국민의힘(국), 미래통합당(미), 국민의당(국당), 시대전환(시), 정의당(정), 기본소득당(기), 무소속(무)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43)	신규 인지 예·결산서 (18)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기후인지 예·결산서로 명칭변경 • 농어촌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탄소감축성과예산서 신규 작성 :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지역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균형인지 예산 신설
	결산·성과 보고서 (3)	•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별도 성과보고서 작성 • 결산보고서 오류에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예산안 투명성 확보 및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감사보고서 작성
	특정 비목의 사용 (8)	•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집행내역 제출 •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내역 공개 • 예비비 사용계획의 국회 제출 • 예비비 사용내역 요구 및 제출 절차 개선 •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관련 제도 개선 •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용 순서 간 우선순위 설정 • 국가 채무 상환시 세계잉여금 사용 최소 비율 100분의 50으로 상향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반영하는 예산의 원칙 추가 • 준예산 집행절차 법률 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첨부서류 내용 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내용 추가, 품질진단 및 관리 실시 • 예산안 첨부자료 내 세수추계모형 포함, 국회제출 및 공개 •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변경 • 예산안 편성지침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 결정 시 정보통신부장관 협의 • 정부의 수시배정,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에 대한 내용 신설 • 국민참여예산제도 법률 명시,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 • 국민참여예산제도 명시적인 법적근거 신설 •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의 예외에 특허청 포함 • 현물출자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에 관한 내용 신설 • 국제감면율 초과시 내역과 사유를 결산 국회에 제출
		• 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기금이 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을 증진에 미칠 영향 분석·평가 • 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과 분석,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 확인
	제도 변경 및 개선 (14)	
	예·결산 운영 (22)	
국가회계법 (18)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신규 인지 예·결산서 (15)	
	인구 (7)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회계법 (18)	신규 인지 에 결산서 (15)	태영호(미) • 청년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시 정부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포함 이영빈(민) • 장애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최영(민) • 장애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우원식(민) • 노동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 분석, 국가적 노동 시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김영진(민) • 소득재분배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 분석,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김승남(민) • 식량자금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 김선교(미) • 규제개혁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제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조정훈(시) • 소득양극화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이소영(민) • 온실가스축인지 에·결산서를 기후인지 에·결산서로 명칭변경 윤미향(무) • 농어촌인지에·결산서 신규 작성 : 예산·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전봉민(미) • 국가균형인지 에·결산서 신규 작성 : 지역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균형인지 예산 신설 권영호(국) • 결산보고서 내 추정 집행내역 추가
		홍성국(민)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시정 방안 작성 및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맹성규(민) • 성과 보고서에 탄소 배출 영향력 고려
	결산·결산보고서 (3)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1-3. 특별회계(20)		
국가재정법 (20)	신규 특별회계 설치 (18)	박대출(국)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재정적 지원(경남 사천) 김회재(민) •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오영환(민)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변재일(민) •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양자종합계획 안정적 추진 유익동(국) •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설치 : 국가첨단산업 국제적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선순환 지원 이장섭(민) • 강화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 강화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촉진 유기홍(민)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 이상민(민) • 사회연대특별회계 설치 : 사회적 재난 극복,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해소 김두관(민) • 기본자산특별회계 설치 :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김형동(국) •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설치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 윤희인(기) • 탄소세배당특별회계 설치 : 탄소세 수입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 장진석(국) • 배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 배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사업비 확보 이상민(민) • 사회연대특별회계 설치 : 사회연대특별회계 제정과 연계해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 선제적 대비 목적의 특별회계 신설
		허영(민) • 담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 다목적댐의 담수용권자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 제외한 금액을 담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으로 출연 신영대(민) •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 새만금사업지역 임대료 수입 발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 존재, 자체 운용 가능한 특별회계 설치 필요 장경태(민)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 제정,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재원 마련 소병훈(민)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설치 :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 유상범(미)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 중앙정부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전담조직 설치,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운영 한기호(미) •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 마련, 접경특화발전지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김병욱(국)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효력 연장
	운영 개선(1)	
	현행법 개정 전체 (6)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39)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신규 기금 설치 (66)	1-4. 기금(70)
	근거법 제정 전체 (40)	•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아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 수산업피해지원기금 설치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대상 특별금융 지원 기금 설치 •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 상생협력연대기금 : 대규모 재난극복 자원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 안전기본법을 신설하여, 국민안전 확보,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규정 마련 • 석유회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 • 석탄회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 설치 근거규정 마련 •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 설치 •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설치 • 중소기업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기업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 해양레저특구 기금 설치 •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 통계산업 진흥법안 제정,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 설치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 설치 • 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선 등 지원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 필요 재원 확보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 필요 재원 확보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39) 재정정책국 재정제도와	근거법 제정 전체 (40)	• 무용진흥기금 설치: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 우주항공청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 •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옹호 사업 등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 설치: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 • 부모보호기금 설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장 • 아세안민주인권기금 설치: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지원 • 청년신용보증기금 설치: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 사회연대기금 설치: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국난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
		•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 설치 •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 •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 • 초과이익공유기금 설치: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 • 이수진(민)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 김예지(국) • 장애예술훈인진흥기금 설치 • 민형배(민) • 정지발전기금 설치: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 • 이상민(민) •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추진 • 김민철(민) •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 • 강선우(민) • 아동복지기금 설치: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 변재일(민)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 • 김경만(민) •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 • 안민석(민) •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 지원 • 이종성(국)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 • 임호선(민) • 교통안전기금 설치: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목적 • 김경만(민) • 동반성장기금 설치: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 구제 • 김병욱(미) • 서해 5도 및 울릉도 독도지원기금 설치: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울릉도와 독도에 정책적 지원
한국은행법(1)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신규 기금 설치 (66)	
국가재정법 (30) 재정정책국 재정제도와	현행법 개정 전체 (26)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30)	신규 기금 설치 (66)	- 이민·통합기금 설치 :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 - 창업공제사업기금 설치 : 초기창업자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 설치 :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 - 아종성(국) 설치 :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 휴먼예금 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현행법 개정 전제 (26)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이 ESG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운용평가요소로 반영
	기금 운영방식 개선 (4)	- 기금 설치 근거 추가 :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 - 기금 운영방식 개선 :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 「한국산업은행법」 추가 - 기금운용 평가시 ESG 고려
		1-5. 복권기금(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	복권 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7)	- 양경숙(민) •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에 소상공인지원진흥기금 추가 - 유기홍(민) •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에 인문사회학술기금 추가 - 김민철(민) • 평화안보분담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 강선우(민) • 아동복지기금 신설 후 기금추가 - 박정(민) • 창업공제사업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 홍정민(민) •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 소병훈(민) •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신설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기금 추가
		- 김예지(국)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사업 추가 - 윤후덕(민)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대한적십자사 사업 추가 - 최혜영(민)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업 추가 - 김주영(민)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용자 지원사업 추가 - 양정숙(무)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양육비 대지급 사업 추가 - 이명수(미) • 복권수익금 사용가능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 기동민(민) • 복권기금 중요재산 공시 - 신동근(민) •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 금지 - 이상현(민) •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안병길(국)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연장
	복권기금 운영방식 개선 (4)	
	복권기금 수익금 사용 (6)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42)	면제사업 (18)	교통 (7)	•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100분의 80 이상인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규정 마련
		보건의료 (6)	• 공공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타 (5)	•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첨단전략기술 관련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개선 및 기타 (22)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9)*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사업규모가 큰 SOC사업 대상 총사업비 1천200억원, 재정지원 규모 7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총사업비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사업 규모가 큰 SOC사업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42)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평가 가중치 조정 (4)	• 건설사업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 도입 • 비수도권지역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예비타당성 평가에 반영 • 비수도권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 결과점수의 50%를 가산 • 비수도권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 결과점수의 40%를 가산
		• 수도권 외 지역 평가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 고려
		•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 강화
	기준 개선 및 기타 (22) 기타 개선 (9)	•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 판단 결과의 국회 보고
		• 정책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 예타의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 국무회의 확정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실시
		•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신규 법률 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예타 규정 삭제
		• 소요예산 부실에 대한 벌칙 신설
		• 국회 제출서류에 정부지급추계서 추가
		• 국회 미제출, 비공개 조사연구 출연 지원금의 차년도 삭감 명시
	기타(2)	

2.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2-1. 국유재산(80)		
국유재산법 (17)	매각 처분관련 (5)	• 행정자산 처분시 절차에 국회 역할 추가
		• 국유재산 매각시 국회 동의 절차 추가
		• 정책심의위원회 임명 및 매각 등에 있어 국회 권한 강화
		•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
	지자체 무상사용 (2)	•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상세를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 삭제
		•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상세를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 삭제
	관리제도 (17)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지원
		• 노후 학교건물에 한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사유 추가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등 명시
		• 국세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은 타 일반재산에 우선해 처분
		• 국유재산에서 아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63)	기타 (10)	• 국유재산관리기금 용도에 대한회계로의 진출금 추가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변경
		•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중단
		• 국가결산시기 조정(5.30.→5.15.)안 의결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제출기한도 이에 따라 조정
		• 국유재산 훼손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규정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특례대상에 추가
		•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특례대상에 추가
		• 국립항공박물관을 특례대상에 추가
		• 도심 정원을 특례대상에 추가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기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설정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63)	• 자율방범대를 특례대상에 추가
		• 국립문학박물관을 특례대상에 추가
		• 문화재조사연구단 법인을 특례대상에 추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특례대상에 추가
		• 정신재활시설을 특례대상에 추가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 국고국
		• 국유재산
		• 조정과
		• 조정과
		• 조정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63)	양여,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확대 (63)	근거법 일부 개정 특례 신설 (19)
		김영주(민) • 잡월드 내 숙련기술전수관을 특례대상에 추가
		최종윤(민) • 잡월드 내 숙련기술전수관을 특례대상에 추가
		이원욱(민) • 잡월드 내 숙련기술전수관을 특례대상에 추가
		임호선(민) •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 사업을 특례대상에 추가
		송재호(민) • 해녀탈의실 등 수협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특례대상에 추가
		한병도(민) • 국립회귀질화센터를 특례대상에 추가
		허영(민) •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을 특례대상에 추가
		문정복(민) • 시니어클럽의 사업을 특례대상에 추가
		정청래(민) • 학교시설 지원을 특례대상에 추가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과학· 기술· 산업(15) (37)	근거법 일부 개정 특례 변경 (6)
		김승수(국) • 연계 개정안 제23조의 지방체육회의 사업까지 특례 확대
		조승래(민) •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양여까지 확대
		서범수(국) • 연계 개정안 제34조 제1항의 폐지된 도시철도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대상에 추가
		정성호(민) • 연계 개정안 제21조의 2에 따른 민자사업의 부대시설까지 확대, 사용료 등의 감면과 장기사용하기로 확대
		김성환(민) • 제26조에 따른 장기사용허가 등을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하기로 확대
		김원이(민) • 연계 개정안 제35조의 4에 따른 철도유류부지를 특례대상에 추가
		배대출(국) • 우주항공복합도시간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이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
		김한정(민)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에 관한 법 제정시 집적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김희재(민) • 남해안발전사업 특별법 제정시 개발지역 내 대상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
국유재산 조정과	과학· 기술· 산업(15) (37)	이철규(국)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 입주기업과 그 지원시설 대상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김희재(민) • 지역본사제 기업의 지역본사 사업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신설
		김주영(민) •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
		서삼석(민) •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강병원(민)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국유재산 무상 대부
		변재일(민) •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장경태(민) • 한국청년경제인협회 사업 대상 국유재산 무상 대부
		강병원(민) • 디지털융합센터 설치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로 감면 등
		소병훈(민) • 공공개발지원 이용의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이장섭(민) •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 규정
신정훈(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윤재욱(국) •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63)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근거법 제정 전제 특례 확대 (37)	이명수(국) • 자율방범대 관련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
		이달곤(국) • 민간해양구조대의 국유재산 무상대여, 사용
		임오경(민)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적용
		기동민(민) •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전제로 관련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적용
		성일중(국) •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 관련 국유재산 무상대부
		김영진(민) •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 전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등
		송영길(민) • 이순신재단 설립 전제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
		양경숙(민) • 부통산감독원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
		이명수(국) • 이순신재단 설립 전제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
		노웅래(민) • 국화영토영해연구원 설립 전제 이에 대한 양여 및 사용료 등의 감면
		이상현(민)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전제, 국립자연유산원 사업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박정(민) •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이용호(미)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시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김석기(미) •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
	교육·보육 (5)	서동용(민) •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전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관련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등
		장경태(민) • 한국양육재단 관련 국유재산 무상 대부
		윤재갑(민)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관련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강민정(열) • 돌봄시설 설치·운영시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권철승(민) • 돌봄시설 설치·운영시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현존 기관 (3)	정경희(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상 사용료 등의 감면	
	김수홍(민)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관련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수익, 사용료 감면	
	이명수(국) • 국립경찰병원 대상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타(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3)	경영평가 및 공시행위 (30)	3-1. 공공기관(139)
		•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포함 • 중증장애인상품우선구매제 이행실적 항목 추가 • 지역발전 기여도 항목 추가 • 지방은행 지정금융기관 선정 여부 항목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 항목 추가 • ESG 경영활동 항목 추가 •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 항목 추가 •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항목 추가 • 기후변화 대응실적 항목 추가 • 지역사회상호협력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항목 추가 •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 추가 •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 추가 •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 항목 추가 •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항목 추가 • 이윤(미) • 노동경리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 추가 • 경영평가단 위원 재선임 근거 마련 • 경영 실적 하락시 성과급 환수 • 고객만족도조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결과 조작시 처벌 • 기관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구분 공시
공공정책 공공정책 총괄과	경영실적 평가 (18)	•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임금격차 공시 • 경영공시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 •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이행결과 공시 • 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 공시
		• 송기환(민) • 김민석(민) • 신영대(민) • 송재호(민) • 이소영(민) • 이낙연(민) • 어기구(민) • 이윤비(민) • 윤준병(민) • 신정훈(민) • 박정(민) • 이해식(민) • 송언석(국) • 신정훈(민) • 양경숙(민) • 추경호(국) • 안민석(민) • 양경숙(민) • 박주민(민) • 김영주(민) • 추경호(국) • 신영대(민) • 홍정민(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경영평가 및 공시항목 (30)	경영공시 (12)	•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공시 • 남녀고용평등 실태조사 결과 공시 •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 공시 • 임직원의 성별 임금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상세히 공시 •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공시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 공시 • 기관장 임기 중 기존 대통령 임기 만료시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 •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 •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 •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 •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 •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 • 기관장 감사 공모지원 자격요건 강화 • 임원후보자 재응모 불가, 연임조건 강화 • 기관장 연임 조건 강화 • 차년도 직원재용계획 등 공시 • 채용시험문제, 점수 등 공개 • 직원재용원칙 법제화 •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상임이사 및 감사 임기 조정, 비상임임원 겸직금지 규정 명문화 • 기관장 임명절차별 기한과 임기만료시 대직수행자를 명시하여 임명지연 방지 • 직무와 무관한 수사 및 조사시에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감사 또는 수사 결과 성과급 오지급시 환수 • 정치운동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 업무상 정보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시 처벌규정 신설 • 직무 관련 부동산 정보 이용시 수사, 처벌, 몰수 • 직원 징계 시효 연장 • 비위행위자 범위 확대 • 임직원 비위시 퇴직급여 제한 • 징계 처분 공통사항 법제화, 채용비위 징계 시효 연장 • 적극업무 추진한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 마련 •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수사기관→소속기관에 통보 의무 유예 • 다지녀 직원 우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3)	인사 및 운영 (63)	
공공정책 공공정책 총괄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3)	인사 및 운영 (63)	인사 (30)
		• 임금조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 여성임원 목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공공기관 공통 기준 마련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모두 종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모두 종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공공기관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주무기관의 승인절차를 추가, 감사원결산검사 대상 확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모두 종장기재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공공기관 사채발행시 기재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추가,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확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 총괄과	인사 및 운영 (63)	재무관리 (20)
		• 종장기재무관리계획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수립하게 하며, 이행보고서를 제출 및 경영평가와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성 강화 및 150억 이상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처분시 소관상임위 동의 필요 • 종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자산처분계획 포함,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 • 기관통합 및 기능조정시 정부보유주식매각 또는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 국회상임위 보고 및 동의 절차 •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에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 또는 주무기관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명문화
공공정책·국 공공정책 총괄과	인사 및 운영 (63)	운영 (13)
		• 공공기관에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 사유를 일치 • 인천공사 해외투자사업 예타면제 위해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해외프로젝트금융투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해외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법상 입찰자격을 일치 • 상생협력법에 따른 입찰제한자는 공공기관에도 입찰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구매시에는 현금결제와 상생결제로 대금지급하도록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법상 입찰자격을 일치 • 공공기관 소재지 인접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성과급을 평가금으로 용어변경 •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93) 공공정책국 공공정책 총괄과	인사 및 운영 (63)	위성곤(민)
	운영 (13)	신영대(민)
한국은행법 (25)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기재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법 (39)	이영(국)
		이용우(민)
		강훈식(민)
		이상민(민)
		윤재옥(미)
		양기대(민)
		김영선(국)
		한병도(민)
		산동근(민)
		김두관(민)
		송재호(민)
		서병수(국)
		서병수(국)
		민형배(민)
		고용진(민)
		양경숙(민)
		윤희숙(국)
		박형수(국)
		박수영(국)
		김용판(국)
		김주영(민)
		김주영(민)
		김도음(국)
		양경숙(민)
		서병수(국)
이용우(민)		
류성걸(국)		
박광온(민)		
김경협(민)		
윤호중(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 은행법 (9)	기재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법 (39)	• 수출입은행이 차주에 신용공여시 한도 적용 예외 조항에 전시, 재난, 구매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 추가 •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없이도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승인 간소화 •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로 규정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 대외경제협력투자계정 신설 •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추가 • 수출입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 •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게 하는 근거 마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상항법하여 전라북도 전주로 정함 • 민간위원 자격요건 변경하여 투자 실무경력 추가 • 폐지된 구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 조문 개정 • 육성재위탁 정책 확대
		김병욱(민)
		김수홍(민)
		서병수(국)
		김두관(민)
		이광재(민)
		송기현(민)
		민형배(민)
		김도읍(국)
		우원식(민)
한국투자공사법 (4)		양경숙(민)
		홍성국(민)
		류성걸(국)
한국조폐공사법 (1)		김경협(민)
		구자근(국)
		• 업무범위에 투표용지 제작 업무 추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3)	민영화 및 기타 제정법안 (7)	• 민영화 대상에서 기 민영화된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중공업주식회사 제외 • 민영화 대상에서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외
		김주영(민)
		고민정(민)
		양경숙(민)
		홍익표(민)
		박광온(민)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통합 관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김주영(민)
		고민정(민)
		양경숙(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 민영화 대상에서 가스공사 제외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통합 관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제정안(4)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통합 관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4.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계약제도 개선 (47)	4-1. 계약 및 조달(57)
		•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환경영향평가서, 사업계획 협의내용 미반영자 입찰자격 제한 • 정부 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의 계약 체결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자의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 입찰 참가 방지 •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 영구적으로 입찰자격 제한 • 근로 강요 사용자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 성폭력범죄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강 및 안보 관련 적합 제품 인정 증명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근로관계 법령을 미준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 • 기타 법률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 당면 제한 • 적극적 고용개선택지 시행계획 미이행에 따른 벌점 초과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종합 심사 • 공공조달 정책의 품질증진·적정가격 보장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복지수요 물품 계약 시 예산의 범위 내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 • 군수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고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규정 (23)	- 박주민(민) - 이학영(민) - 윤건영(민) - 홍영표(민) - 이정문(민) - 소병훈(민) - 정청래(민) - 김정재(국) - 구자근(국) - 강민정(열) - 이해식(민) - 장혜영(정) - 김주영(민) - 강민정(민) - 김성원(국) - 정부 - 정춘숙(민) - 김정재(국) - 김경만(민) - 박대출(국) - 김민기(민) - 김병주(민) - 양경숙(민)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계약제도 개선 (47) 제도개선 (24)	윤영석(국) • 물가변동분에 연동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양기대(민) •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고정불가
		장철민(민) •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시 전문기관 감독·검사, 준공검사 의무화
		김용민(민) • 예정가격 100분의10 초과시 심의위원회 심의, 소속기관장 승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신동근(민) • 발주기관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활용 근거 마련
		송언석(국) • 장기계속계약 계약기간 약정, 계약상대방 미책임 사업 지연시 기간연장, 금액 조정
		김수홍(민) • 장기계속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총계약기간 변경 포함
		류호정(정) •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의무 준수, 위반 및 처벌시 계약 해제·해지
		강기윤(국) •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 반영
		이성만(민)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법률 상향, 비공개 사유 제출, 정보 공개
		김영진(민)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법률 상향, 비공개 사유 분기별로 공시 및 소관상임위 제출
		민형배(민) •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서일준(국) • 물품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 도입 우선 검토
		김경만(민)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계약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부계약자 시공 30%이상 참여
		윤준병(민) •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지체상금 납부 결제수단 선정
		우원식(민) • 공정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 의무 명시
		이광재(민) • 경쟁입찰의 사전심사 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 포함
		김주영(민) • 국가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근로자 보호 포함
		김승원(민) •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시 진행불가, 위반 시 처벌, 수의계약 체결 시 공개
		진선미(민) • 계약금액 및 기간연장 근거 마련, 계약변경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 명시
		박주민(민)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에 포함, 고용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최승재(미) •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 체결
		홍익표(민) • 정부조달협정문 적용 예외사유 법률상향, 국제입찰 적용예외사유 해당여부 우선 검토
		정희용(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주요 요건 규정,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고려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공조달 정책과	조달 및 기타 (11)	문정복(민) • 조달물자 결함 발생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류성걸(국) • 이용업체의 비촉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강기윤(국) •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 신설
		이인영(민) • 공공기관 등의 금전 목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으로 규정
		이병훈(민) • 시행령 및 훈령에 위임된 비촉물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임법
		이낙연(민) •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이용선(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ESG 요소 의무적 고려
		서일준(국) • 국민 안전, 동식물 보호를 위해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 체결
		한준호(민) •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보다 쉬운 표현인 '고려'로 개정
		전봉민(국)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사항 기록·관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 기재부 국고국 공공조달 정책과	전자조달 (2)	권명호(국)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

5.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23) 재정성과 평가과	근거법 제정 전제 (8)	5-1. 부담금(23)	
		최형두(국)	• 중소형원자로 소요 자원 확보를 위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신설
		김영식(국)	• 선진소형원자로 소요 자원 확보를 위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신설
		송옥주(민)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김정재(국)	• 이산화탄소배출 부담금 부과,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
		양이원영(민)	•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 기금 근거 마련,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
		김종민(민)	•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근거 추가
		허영(민)	•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 출입자 대상 부담금 신설
		김영배(민)	•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
		신정훈(민)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대상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임이자(국)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업자 대상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허영(민)	• 유역관리기금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 설치
		위성곤(민)	• 제주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 이용 입도자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김정호(민)	• 소음대책지역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대상 소음부담금 신설
	현행법 개정 전제 (13)	김성주(민)	•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김영주(민)	•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청년 고용부담금 신설
		윤준병(민)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 신설
		김두관(민)	•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위한 부과금 신설
		남인순(민)	•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 추가
부담금 운용 (2)		윤주경(국)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 부과
		김원이(민)	• 의료기기 제조사 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확보
		여기구(민)	• 해상운송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 대기업 물류회사사 대상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징수
		정부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통합 관리
		박완주(민)	•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 예산실 예산기준과	보조금 투명성 제고 (6)	6-1. 보조금(21)	
		박성민(국)	• 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김주영(민)	•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벌칙 부과
		김용판(국)	•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시법 위반행위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김주영(민)	• 소규모 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추가
		이양수(국)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 강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보조금 금액 5억원으로 하향조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조금 절차 개선 (5)	송언석(미)	•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하향조정, 제출 의무자 확대
		하태경(국)	•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 범위 내 지출, 회계 관리 교육
		박홍근(민)	• 복지분야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근거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이해식(민)	• 국가전략적 필요 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거 신설
		최연숙(국당)	• 보조금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전 공지, 변경 불가
		김영배(민)	• 중앙관서 장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금 예산 요구시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도록 명시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11)	소병훈(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 추가
		하영재(국)	•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및 고령화 보조사업 차등보조를 적용
		유정주(민)	•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재해 등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반환예외 적용
		서삼석(민)	• 농업재해 방지·극복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사업 대상 국고보조를 50%까지 지원
		신현영(민)	•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조사업 대상 우대 보조를 적용
		이종배(국)	•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
	보조사업 범위 확대 (10)	김원이(민)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를 적용
서삼석(민)		• 농어촌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를 적용	
정춘숙(민)		•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자립정착금 국고 지원	
우원식(민)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범위: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대상 특별금융 지원	

7. 기타 제·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15) 미래전략국 지속가능 경제과	협동조합 (18)	7-1. 협동조합(18)
		•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 신설
		•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 지원
		•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범위 확대
		• 상호부조 목적 공제사업 실시, 상호부조사업 납입 출자금 한도 내 규제 삭제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익증진 사업에 생산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적용대상 포함
		•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 변경신고 대상 축소, 신고 부담 완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의결권 행사
		• 종합적인 협동조합 정책 수립·시행,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
		• 총회 원격영상회의, 임원선출 자격 확대
		•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
업연초생산 협동조합법 (2) 국고국 출자관리과	협동조합 (18)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
		•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범위 확대
		• 한자어 표현인 '회상'을 우리말 표현인 '사진·영상'으로 개정
제정안(1)	이하영(민)	• 사회적 협동조합법안 :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 관련 규정에서 분리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7-2. 담배(15)		
담배사업법 (14) 국고국 출자관리과	판매운영 관리 (11)	•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 관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 금지 • 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 연초의 줄기, 뿌리 담배,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규제 •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 금지 • 연초 줄기·뿌리담배 규제,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가향물질 캡슐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법률 상향,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로 규정 • 소매인 제지정 시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 승계 •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규제 단속 주체 일원화 •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매년 1회 실시 의무화, 제재 및 처벌 강화 • 담배 광고내용을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 부착하도록 명시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공개 •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 포장지에 경고문구 표시 • 담배책임법을 제정하여 담배의 결함을 기존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
제정안(1)	유해성 관련 조치 (4)	
7-3. 통계(15)		
통계법 (13) 통계청 통계정책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기관운영 (4)	• 통계청장 임기를 중임 없는 3년으로 규정하고,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 신설 • 통계데이터처리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 • 통계데이터처리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적격성 검증절차 거쳐 임명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 공표 전 통계 제공 가능 기관 범위 한정, 제공 사유 의무 기록 • 통계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 참고 및 반영 여부 결정 • 국제표준분류 미소속 국내 산업 대상 분류코드 규정 등 • 통계관련 처벌 수준의 상향조정 •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제출 자료 활용 통계의 현행 규정 삭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30이상) 요구 시 통계청장의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의무화 • 통계 사전 제공 시 공표예정 전달 증권 정규시장 종료 후 제공 • 복한 관련 통계 수집·작성 및 관리, 협력 사업 수행 • 통계산업 진흥법 제정 : 통계산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
	통계관리 (9)	
	통계산업(1)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7-4. 기타 일부개정 법안(41)		
경제교육 지원법(2)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조명희(국)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 포함
	태영호(국)	사회약자 대상 경제교육 보안, 관계기관 협력 강화
	김도읍(국)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문화
	박광운(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약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 제외
	장철민(민)	지역자율계정 세출에 지역 교육격차 해소 사업 보조 추가
	정점식(국)	특별회계 보조 사항에 대중교통 포함
	허영(민)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 설치
	김영배(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내용 추가
	김영진(민)	특별시계정 신설
	한병도(민)	지역자율계정 세입세출에 인구감소위aggi지역 포함
기타 일부개정 법안 (41)		부당한 공권력 행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채무 감면
국가채권 관리법 (2) 국고국 국고과	진성준(민)	채권현재액총계산서 국회 보고시기를 5월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에는 기존과 동일한 5월31일로 함
국고금 관리법 (3) 국고국 국고과	김상훈(국)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고금에 포함
	장혜영(정)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 의무화
	진성준(민)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기한 기존과 동일 적용
국채법(1) 국고국 국채과	박광운(민)	국민연금기금 자금 확보를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
대외경제협력 기금법(1)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김도읍(국)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노력할 의무를 명문화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물품관리법 (2)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기타 일부개정 법안 (41)	양이원영(민) • 공공요금 결정,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의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
		황희(민) •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김운덕(민) • 공공요금지문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준병(민) • 과징금 납부 방법을 국제징수법과 같이 현금, 증권 및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명시
		박광온(민) •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용도, 양여대상자, 사유 등 공개
		진성준(민) •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회 제출시기 기존과 동일 적용
		김두관(민) • 민간투자사업 정보 투명성 법률에 규정
		안병길(국)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조사의 단축
		정성호(민)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
		김도읍(국)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환경부 기후경제과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		한준호(민) •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한글표현인 '지급'으로 변경
		김도읍(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 관리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양이원영(민) •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
		우원식(민) • 상쇄 배출권 한도 제한
		민형배(민)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김성원(국) •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종의 취소에 관한 내용 규정
		정부 • 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
		박대출(국)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유통 지원
		용혜인(기) • 외국과의 외환거래 또는 지급시 허가 필요 요건에 전쟁범죄 등 추가
		윤준병(민) • 과징금 납부 방법을 국제징수법과 같이 현금, 증권 및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명시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기타 일부개정 법안 (41)	민홍철(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민홍철(민) • 혁신도시 시책 추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균형적 배분, 지역균형발전 고려
		윤창현(국) • 인구감소관심지역 규정
		하영제(국) • 비상책임시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고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 국고국 국고과		

관련 법률	유형	7-5. 기타 제정안(32)		주요 내용
탄소세 기본법안	세금 (7)	기동민(민)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한 탄소세 제도 신설
탄소세법안		용해인(기)		• 탄소세 신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력적 탄소세 세율 마련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해인(기)		• 탄소세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해인(기)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신설,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심상정(정)		•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 촉진, 토지 투기 방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 환수
사회연대특별세 법안		이상민(민)		• 사회연대특별세 구축 목적의 자원 확보를 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청년세법안		장경태(민)		• 청년세법 제정,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자원 마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5)	김영배(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정혜영(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도화
		양경숙(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정착
		윤호중(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강병원(민)		•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 마련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ESG (3)	조해진(국)		• ESG 입법 규제 대응, 중소기업 지원, ESG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민)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이원욱(민)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법 제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 (3)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심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운영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운영,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 강화
국가보상법안	재산권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법적 근거 마련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기타 (7)	•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 마련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개발된 지표 및 지수 활용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통합적 규율,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 기본자산제도 법률 제정,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실현, 자산형성기회 사회적 격차 해소
공유경제 기본법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 법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
기본소득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		• 5년마다 기본소득의 도입연구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 설립

관련 법률	유형	주요 내용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개정법률안 (5)	소병철(민)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정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국)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내 “심신장애” 표현 일괄 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민)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의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원칙적 금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FIS 재정리포트 24-01

VAR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정적 물가 이론 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2

한·일·중 3국 재정운용 동향

FIS 재정리포트 24-03

주요국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현황

FIS 재정리포트 24-04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실적 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5

제21대 국회 재정분야 폐기법안 분석